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청 아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홍 백 의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청 아

이청아의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 원 장	구 인 회	(인)
부위원장	김 수 영	(인)
위 원	홍 백 의	(인)

국문초록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청아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복지국가 변화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복지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최근 다양한 인종과 집단의 유입으로 복지국가는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외집단에 대한 위협인식이 내국인의 복지정책 지지를 약화시키면서 이주민 수용과 사회통합이 과제가 되었다. 한국은 2010년대부터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타나면서 이주민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향후 포용적인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계획 설립 시, 복지국가에 미치는 다문화수용성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이주민에 대한 위협인식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 정책 환경에서 정부신뢰는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고 개개인이 위험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정부신뢰가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신뢰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가?

본 연구는 2021년 수행된「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8,077명의 응답내용을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가설의 통계적 검증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문화수용성과 정부신뢰가 '분배지향태도'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주효과와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기제로서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수용성이 '분배지향태도'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각각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신뢰 정도가 높아질수록 '분배지향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는 정부신뢰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분배지향태도' 모형의 R^2변화량과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도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모형의 R^2 변화량과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복지태도의 가치관 요인 중 도외시되었던 다문화수용성과 정부신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실증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는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또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논의를 심화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사회와 그에 따른 포용적 복지국가의 모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정(+)적 효과를 주목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의 사회적 자본 증진, 다문화 인식 전환에 대한 중장기정책 목표 및 교육 설립, 사실적 정보 전달을 위한 대중매체 육성 및 모니터링, 이주민에 대한 동화정책이 아닌 공생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둘째, 정부신뢰가 복지태도 영향요인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밝힘으로써, 투명한 정보공개 및 낮은 정보접근권, 소통창구 마련으로 인한 정부신뢰 향상을 제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만을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연구결과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인과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다문화수용성 변수와 정부신뢰 개념의 개념적 타당성이 다소 저해되었다는 한계가 있고, 개별 복지 정책 분야에서의 복지태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다문화수용성, 복지태도, 정부신뢰, 조절효과
학 번 : 2020-22239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목적 및 연구 문제 ·····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 6

제 1 절 복지태도 ····· 6

1. 복지태도 정의 ····· 6

2.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9

3. 소결 ····· 17

제 2 절 다문화수용성 ····· 19

1. 다문화수용성 정의 ····· 19

2. 집단위협이론: 다문화수용성과 복지태도 ····· 21

제 3 절 정부신뢰 ····· 23

1. 정부신뢰 정의 ····· 23

2. 정부신뢰와 복지태도 ····· 25

제 4 절 기존 연구의 한계 ····· 27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 29

제 1 절 연구모형 ····· 29

제 2 절 연구가설 ····· 30

제 4 장 연구방법 ····· 32

제 1 절 분석자료 ····· 32

제 2 절 분석방법 및 변수설명 ····· 34

1. 분석방법 ····· 34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37

제 5 장 연구결과 ····· 44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주요변수의 기술분석 44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44
2. 정부신뢰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7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 50
4.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결과 ····· 51
제 2 절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 53
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부신뢰 ····· 53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 55
제 3 절 가설검증 ····· 59
1. 모형1: 분배지향태도 ····· 59
2. 모형2: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 66

제 6 장 결론 ····· 72
제 1 절 분석결과의 요약 ····· 72
제 2 절 연구의 함의 ····· 75
1. 이론적 함의 ····· 75
2. 정책적 함의 ····· 77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87

참고문헌 ····· 90
[부록 1]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연구결과 ····· 112
Abstract ····· 123

표 목 차

<표 2-1>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7
<표 4-1> 변수 조작적 정의 ····· 42
<표 5-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46
<표 5-2> 정부신뢰에 따른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 49
<표 5-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및 정규분포성 검토 ···· 51
<표 5-4>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 52
<표 5-5> 연구대상자 특성별 정부신뢰 차이 ····· 54
<표 5-6> 연구대상자 특성별 분배지향태도 차이 ····· 56
<표 5-7> 연구대상자 특성별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 58
<표 5-8> 모형1: 분배지향태도 ····· 63
<표 5-9> 모형2: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 70

그 림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 29
[그림 5-1] 다문화수용성-분배지향태도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
과 ····· 65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고용불안정성 증가, 소득 불평등의 증가, 일과 돌봄 책임의 충돌, 인구 고령화와 같은 소위 '신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을 경험하면서 복지국가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때 필요한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복지국가 변화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구성원의 복지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Page & Shapiro, 1983; 백정미 외, 2008; 이한나・이미라, 2010). 복지제도와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태도를 분석하는 것은 대중의 수요 정도 예측과 국가개입의 여부 및 개입 수준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개인의 책무 부담에 대한 태도를 가늠하는 척도를 보여준다. 특히, 현재 복지정책 및 복지확대에 대한 대중의 지지 정도를 측정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지속성에 대한 기준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의 복지태도를 알아냄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매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복지태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져왔다(Papadakis & Bean, 1993; 조돈문, 2001; 이성균, 2002; Blekesaune & Quadagno, 2003; Hansenfeld & Rafferty, 1989; Andreß & Heien, 2001; 주은선・백정미, 2007; 백정미 외, 2008; 류만희・최영, 2009; 이아름, 2010; 이훈희 외, 2011; 김영순・여유진, 2011).

한편, 보편적 복지국가가 모든 사회 계층과 집단을 포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반대로 최근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종과 집단의 유입을 경험하면서 복지국가는 새로운 도전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외집단에 대한 위협인식이 내국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면서 이주민에 대한 수용 정도가 복지국가의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주

민에 대한 수용 태도가 낮을수록 복지 재분배 혹은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약해진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Senik et al., 2009; Finseraas, 2008; Garand et al., 2017; Burgoon & Rooduijn, 2021).

2017년 기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는 약 2억 5천 8백만 명으로 이는 1990년 대비 69% 상승한 수준에 이른다(IOM, 2018). OECD 국가에만 전체 인구의 약 10%에 이르는 1억 2천 8백만 명의 이민자가 거주하며, 이들의 자녀를 포함한 이민배경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7%에 해당한다. EU 회원국 역시 전체 인구의 약 18%에 해당하는 이민배경 인구를 갖고 있다. 이주 현상이 뚜렷해지고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위협인식과 혐오로 인한 반이민정서가 포용적 복지국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Tausch, 2016; Goodwin & Milazzo, 2017). 2015년 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유럽사회 내 테러확산에 대한 위협과 불안감은 유럽 사회 내 무슬림에 대한 반 이민 감정을 가져왔으며(Haas et al., 2020), 유럽 내 반(反)이민 정서는 극우정당의 부상으로 이어졌다(오창룡, 2017). 또한,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 애리조나를 비롯한 여러 주 정부에서 불법이민자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하는 강력한 반이민법이 시행되는 등 이주민에 대한 위협인식이 복지갈등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외국인의 절대적 규모나 혹은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가 여전히 적은 국가에 포함되나, 2000년대 이후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매년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전체의 약 5% 정도를 차지하고(여성가족부, 2018), 2019년 기준 체류외국인 수는 약 252만 4천여 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법무부, 2019) UN은 한국이 인구부족 현상으로 인해 2050년까지 1,2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전체 인구의 21.3%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박근

수・곽연희, 2013). 즉, 한국 내 이주민(외국인)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미래의 한국형 복지국가를 의논할 때 다문화사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한국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의 공존에 근거한 사회통합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이형하, 2014). 그러나 순혈주의, 단일민족과 같은 가치관 및 인식은 다른 인종 혹은 집단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저항을 크게 만들면서(장수지, 2021) 한국사회는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민의 많은 유입으로 인해 복지갈등을 겪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반이민 갈등이 심하지는 않지만, 한국 또한 이주노동자의 실업급여 편법 수령,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권인욱, 2022) 이주민(외국인)으로 인한 복지갈등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 향후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위한 계획 설립 시, 복지국가에 미치는 다문화수용성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이주민(외국인)에 대한 위협인식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 불확실한 정책 환경에서 정부신뢰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고 개개인이 위험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다(Flynn et al., 1992; Blind, 2007). 정부신뢰는 사회구성원이 정부에 대해 갖는 주관적 ‘해석’의 결과이자 정부정책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서, 정부의 행위가 개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믿음을 바탕으로 이러한 상황을 수용 가능하도록 한다(Flynn et al., 1992; Blind, 2007). 즉,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신뢰를 보일 때, 개인은 본인의 물질적 혹은 이념적 이해를 희생하면서까지 복지정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신뢰가 복지태도와 다문화수용성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성향을 조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사회적 위험과 함께 다양한 집단과 인종이 유입되며 새로운 복지국가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정부신뢰의 영향력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신뢰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선행연구들은 존재하나, 정부신뢰가 개인의 위협 및 희생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에 초점을 두어 조절효과를 탐구하는 연구는 부재하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복지국가에 새롭고 중요한 과제로 작용하는 가운데, 다문화수용성에 따라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리고 정부신뢰가 이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한국의 향후 복지국가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제 2 절 연구목적 및 연구 문제

위에서 제기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통해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신뢰가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때, 복지태도는 '분배지향태도'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 의지'를 포함한다. 본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정부신뢰가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신뢰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가?

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에 앞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다. 제1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복지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복지태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독립변수로 거론하고 있는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특히, 집단위협이론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다문화수용성과 복지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제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신뢰에 대해 다뤄보며, 정부신뢰가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거론하며,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신뢰를 조절변수로 설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려 한다.

제 1 절 복지태도

1. 복지태도 정의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는 국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로서 정의된다(Taylor-Gooby, 1985; Svallfors, 1991; Papadakis & Bean, 1993; Blekesaune & Quadagno, 2003; Larsen, 2008). 국내 연구에서는 대체로 복지태도를 복지 제반에 대한 선호로 정의한다(류진석, 2004; 안상훈 외, 2021). 이때, 국내 연구에서 복지태도는 복지태도(welfare consciousness), 복지의식(welfare perception), 복지선호(welfare preference)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되어 왔다(이광훈・김권식,

2012). 특히, 복지의식과 복지태도에 대한 용어 사용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학자에 따라 두 개념을 구분하거나 혹은 동일하게 보는 등 관점에 차이가 존재한다(이한나・이미라, 2010). 두 개념을 구분하는 연구는 복지의식을 복지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 현상들에 대한 감정, 신념, 원칙과 같은 가치 영역으로 정의하고, 복지태도를 복지의식에 기초한 행동의 양식, 성향, 태도와 같은 행동성향이라고 정의하였다(이중섭, 2009; 김영순・여유진, 2011). 노대명・전지현(2011)은 복지의식이란 개인이 복지정책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고, 복지태도는 복지의식에서 포착 가능한 언어적 혹은 기호적 표상이나 행동성향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이광훈・김권식(2012)은 복지의식을 국가의 복지 책임 정도 및 복지정책의 재원에 대한 개인의 의식 또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반면, 복지의식과 복지태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보는 연구들은 복지의식을 “복지제도, 복지체계에 대한 개인의 태도 혹은 의식, 가치관”으로 개념화(김상균, 1994; 양옥경, 2002)하면서 복지태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Taylor-Gooby(1985)는 복지태도를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 여부, 복지비용, 복지국가 등에 대한 사회적 태도로 규정하였는데,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복지의식은 복지에 대한 감정이나 신념을 의미하는 바가 강한 반면에 복지태도는 복지의식에 기반한 행동 성향을 더 강하게 포착한다는 점에서 사회현상으로서 더 주요한 관심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김영순・여유진, 2011). 또한, 복지의식은 분석에 모호한 점이 있는 반면, 복지태도는 실증적 분석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복지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노대명・전지현, 2011). 이러한 이유에 더하여 해외에서도 복지의식보다는 복지태도라는 표현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 여부, 복지비용, 복지국가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점(Taylor-Gooby, 1985)에서 복지태도를 구성하는 변수들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복지태도를 연구할 때, 선행연구들은 크게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성장과 분배’, ‘개별복지제도에 대한 태도’ 등의 질문을 복지태도의 대리변수로 설정하고 있다(류진석, 2004; 주은선・백정미, 2007; 류만희・최영, 2009; 이아름, 2010; 김신영, 2010; 김영순・여유진, 2011; 이훈희 외, 2011; 노대명・전지현, 2011).

본 연구에서는 그중 ‘성장과 분배’와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한국형 복지국가가 형성되고 있는 최근, 치열하게 논쟁되어 온 지점은 성장과 분배에 대한 개인의 태도였다(김수완 외, 2014).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까지도 복지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다(윤홍식, 2012). 성장과 분배에 대한 태도는 보편주의 혹은 소득격차 해소를 지지하는 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인 복지와 소득격차 해소를 지지하는 개인이더라도 분배를 성장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허수연・김한성, 2016). 이와 함께 복지 증대를 위한 증세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불가피한 정치적 과정으로 보여진다(양재진・민효상, 2013). 다양한 종류의 복지서비스와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수적이기에, 복지확대는 증세 이슈와 불가피하게 연결된다(김사현, 2015). 그러한 만큼,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 의지는 복지의 적극적 구현에 실천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2.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계급 요인

복지태도의 계급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 theory)을 기반하여 계급(class)의 영향력에 집중하였다(Korpi, 1989; Svallfors, 1995; Korpi & Palme, 2003). 이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부의 재분배를 원했던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산물이다(Stephens, 1979; Korpi, 1983; Esping-Andersen, 1985). 그래서 노동자계급은 탈상품화 효과 및 연대효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계 유지가 가능한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친복지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자본가계급은 주된 복지 비용부담자임과 동시에 복지국가 발달이 가져올 시장의 약화에 대한 우려로 반복지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설명한다(이훈희 외, 2011; 김영순・여유진, 2011). Gingrich & Ansell(2012)의 연구에서는 실업위험이 큰 직군이 복지지출에 더욱 찬성한다고 알려졌다. 한국의 1990년대 연구결과에서는 중상계급 및 상층계급은 사적복지를 선호하는 반면, 하층계층은 공적복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치민, 1995; 김영란, 1995).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본가 계급은 복지제도를 통해 받는 혜택보다 복지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며, 사적 복지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다(김희자, 2013). 이는 계급의 소속감이 복지태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훈희 외, 2011).

그러나 노동자계급 내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임시직, 파견직 등과 같이 세분화에 따라 이해관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자본가 계급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타나면서, 복지태도에 대한 계급요인 측면의 설명은 비판을 받고 있다(허수연・김한성, 2016). 특히, 계급요인의 경우 유럽 복지국가의 복지정치의 역사를 설명하기에는 적합한 변수이지만, 한국에서는 계급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그 구분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기도 한다(이훈희 외, 2011, 허수연・김한성, 2016). 실제

2000년대 이후의 다수의 국내 연구에서 복지태도에 대한 계급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조돈문, 2001; 이성균, 2002; 이아름, 2010; 김영순・여유진, 2011). 조돈문(2001)은 공공의 복지책임, 복지정책의 필요성, 복지재정 확대에 대하여 계급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며, 이성균(2002)의 연구에서는 실업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정부책임 인식에서만 일부 계급적 차이가 나타났다. 이아름(2010)의 연구에서는 복지 대상 집단별 복지지출의 확대에 대한 지지도에서 계급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김영순・여유진(2011)은 한국인의 복지태도에는 비계급성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계급변인은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포함되고 있다.

2) 자기이해 요인

신복지정치이론(Pierson, 1996, 2001)은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계급구조의 분화에 따라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계급 요인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자기이해의 차원에서 비계급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안상훈 외, 2021). 이러한 자기이해 요인은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 기반하여 개인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선호한다는 논리가 중심이 된다(Papadakis & Bean, 1993). 즉, 개인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로서 복지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본인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가에 따라 다른 복지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허수연・김한성, 2016).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 관련 복지 지출 확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고, 저소득층은 공공부조 관련 복지 지출 확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더 친복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류만희・최영, 2009). 자기이해 요인은 성별, 연령 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소득, 교육 등의 사회경제학적 요인 그리고 사회보험 관점 요인을 포함한다(이아름, 2010).

(1) 인구학적 요인

우선 인구학적 요인 중 자주 논의되는 요인으로는 성별(gender)이 있다. 성별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친복지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Edlund, 1999; Blekesaune & Quadagno, 2003; 이훈희 외, 2011). 여성일수록 수명이 길고, 가족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지출 확대에 찬성의 태도를 보인다. 또한, 여성은 출산, 육아, 가사와 같은 이유로 남성보다 복지수혜 가능성이 높고(van Oorschot, 2002; Svallfors, 2011), 가족보호에 대한 부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등으로 인해 복지제도 및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Svallfors, 1995) 복지 증대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더불어 여성의 고용증가는 공공부문의 증대에 기인한다는 면에서(Sainsbury, 1996; 안상훈, 2000) 더 친복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분석이 존재한다(최고은, 2016). 하지만 Andreß & Heien(2001)의 연구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친복지적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인다. 이렇듯 성별 변수의 통계적 유의도, 방향성은 연구에 따라서 엇갈리기도 한다(김희자, 1999; 조돈문, 2001; 백정미 외, 2008; 권승, 2012; 김윤태 외, 2013).

연령의 경우 젊은 연령대는 아동수당 혹은 가족수당을 선호하고 노령층은 연금을 선호하여 대체로 친복지적 태도를 보일 수 있으나(Ponza et al., 1988; Pettersen, 2001) 성별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김희자, 1999; 주은선・백정미, 2007). 젊은 연령층이 복지수혜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친복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가(Hansenfeld & Rafferty, 1989; Andreß, & Heien, 2001; 주은선・백정미, 2007) 있는 반면, 노년층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친복지적 태도를 보이는 가능성이 있으며, 중년층은 이에 비해 복지증대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김병섭・강혜진, 2015)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보통 복지 수혜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가 복지 증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노년층은 퇴직 이후 연금과 의료와 같은 복지에 의존하고 젊은 연령층은 부족한 경제기반으로 인해 주거, 출산, 양육

에 대한 복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연령과 복지확대는 비선형의 U자형을 보여주는 관계라고 보기도 한다(조진만, 2014; 남윤민, 2018). 그러나 연령은 정치이념과도 연결되어 정치이념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된다는 측면에서 노령층이 무조건 복지 확대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류만희・최영, 2009). 또한 한국사회에서 산업화를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는 정부의 경제 개입에 대하여 다른 복지태도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김병섭・강혜진, 2015) 연령 변수도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 사회경제학적 요인

다음으로는 소득,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학적 변수가 주요변수로 제시된다(김영순・여유진, 2011; 윤도현, 2013; 전희정・서동희, 2015). 박종민(2008)의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혹은 계층의식이 높을 때, 정부의 복지역할보다는 경제역할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은 복지지향의 국가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은 성장 지향의 국가를 지지한다는 연구도 있다(Huseby, 1995).

사회경제학적 요인 중 가장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자기이해 요인으로는 소득이 있다(Linos & West, 2003). 저소득 노동자는 고소득 노동자보다 사회보장 혹은 재분배에 대한 더 큰 욕구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Iversen & Soskice, 2001; Rehm, 2009; 이인재, 1998; 주은선・백정미, 2007; 김윤태 외, 2013; 조진만, 2014). 선별적 복지제도는 저소득층에게는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지만, 고소득층에게는 납세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객관적 소득뿐만 아니라 주관적 소득 또한 복지태도와 상관있는 것으로 보고된다(Rainer & Siedler, 2008; Roth & Wohlfart, 2018). 그러나 복지태도에 있어 소득수준의 설명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들이 있다(류진석, 2004; 주은선・백정미, 2007; 김영순・여유진, 2011; 금종예・금현섭, 2017). 2000년대 초반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복지확대와 증세에 찬성하는 태도를 나타냈으나(이성균, 2002; 류진석, 2004; 류만희・최영, 2009), 최근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 복지증세를 더 지지하며, 중간층이 복지확대는 지지하더라도 증세에는 가장 소극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김신영, 2010; 김영순・여유진, 2011; 김희자, 2013; 황아란・이지호, 2015).

교육 변수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확대에 대한 지출에 동의하는 입장이 많고, 지출 확대에 따른 조세부담의 확대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김병섭・강혜진, 2015). 이는 일정 정도 소득지위가 중간층 및 중상층인 집단에게서 긍정적인 조세부담 의사가 나타난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훈희 외, 2011; 노대명・전지현, 2011).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교육 수준이 높은 개인은 현재 또는 미래에 소득 및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재분배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Iversen & Soskice, 2001; Rehm, 2009; Tomlinson & Walker, 2012).

(3) 사회보험 관점 요인

복지태도에 대한 사회보험 관점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인지할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책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한다(Iversen & Soskice, 2001). 사회보험 관점은 계급지위, 사회경제적 지위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계층의 복지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자기이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이해 요인에 의하면, 복지제도의 수급자 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이 더 친복지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주은선・백정미, 2007; 류만희・최영, 2009). 즉, 복지제도의 혜택을 경험

한 이들이 복지 확대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경향이 높고 납세 부담을 가진 개인이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감세를 지지하지 않는다(Andreß & Heien, 2001; Hansenfeld & Rafferty, 1989; 주은선·백정미, 2007; 안상훈, 2009; 김사현, 2012). 예를 들어 청년층은 아동이 있는 가구를 위한 서비스와 실업 급여에 호의적이고, 노년층은 상병수당 혹은 아픈 이들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 더 지지적인 태도를 보인다(Blekesaune & Quadagno, 2003).

3) 가치관 요인

그러나 그간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자기이해 요인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자기이해 요인이 아닌 가치관 요인에 주목하는 연구 흐름이 대두하였다(Larsen, 2008). 즉, 가치관 요인은 자기이해 요인으로 개인의 복지태도 형성에 대해 설명이 불가능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나타난 것이다(이중섭, 2009).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복지제도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주관적인 인식 또는 가치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다(김미혜・정진경, 2002; 류진석, 2004; 김사현・홍경준, 2010; 이상록・김형관, 2014; 우명숙・남은영, 2014). 특히, 가치관 요인 변수로는 정치성향, 분배에 대한 규범적 태도, 복지체제의 역할 및 복지대상자에 대한 가치판단 등이 영향을 주고 있음이 여러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다(이중섭, 2009; 이아름, 2010; Blekesaune & Quadagno, 2003; Rudolph & Evans, 2005; Craig et al., 2006).

(1) 정치 성향

진보적 정치이념을 가지고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개인일수록 복지확대 및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높은 지지와 복지 친화적 태도를 보인

다(Fong, 2001; Corneo & Gruner, 2002; Svallfors, 2011; Taylor-Gooby, 2001).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진보적 정치이념을 가질수록 복지확대를 지지한다는 연구결과(이현우, 2013; 김윤태 외, 2013; 장승진, 2017)와 정치성향은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다(조진만, 2014; 금종예・금현섭, 2017)는 반대의 결과가 발견되었다. 또한, 보수적인 정치이념을 가졌더라도 시장경제의 자율성은 찬성하는 입장과 선도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지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있기도 하다(박종민・조인영, 2007).

(2) 다문화수용성

여러 국외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인종과 문화 배경을 가진 사회집단에 대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 재분배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Kirchner et al.(2011), Crepaz & Damron(2009), Marquart-Pyatt & Paxton(2007)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가 복지국가 지출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개인이 본인이 속한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 대하여 배제 및 거부하는 태도 혹은 감정은 복지 재분배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enik et al., 2009; Finseraas, 2008; Garand et al., 2017; Burgoon & Rooduijn, 2021). 다른 사회구성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개인은 복지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지며(Haselswerdt, 2021), 이는 복지 재분배가 복지 수급의 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부채질하는 반연대 효과를 가져온다(Burgoon & Rooduijn, 2021). 즉, 한 개인이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재분배되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이들이 본인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Haselswerdt, 2021).

(3) 정부신뢰

정부신뢰가 복지태도에 중요한 변수임은 선행연구들에서도 확인된다. 정부신뢰는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특정 집단이 정부에 대해 어떤 행동을 보일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기에 이를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Chanley, 2002). 그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정부신뢰와 정책지지(금현섭・백승주, 2010), 정부신뢰와 정책선호(Hetherington & Globetti, 2002) 간의 관계, 정부신뢰와 정책태도(Konisky et al., 2008) 등을 다루어왔다.

정부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지식・기술분야와 비교하여 복지의 상대적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한다(임고운빛, 2015; 이진향, 2021). 또한, 복지정책 수행기관에 대한 신뢰는 복지예산 확대 동의에 있어 중요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쳐(김신영, 2010; 최성락・전별, 2019), 정부신뢰도가 높은 구성원들은 복지 증세에 덜 비관적이며 세금부담 저항 정도가 적다(Scholz & Pinney, 1995; Scholz & Lubell, 1998; Jimenez & Iyer, 2016; 문승민・최선미, 2019). Svallfors(2002)는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세금징수에 대해 반대가 적고 국가가 세금을 낭비할 것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적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하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 정부 행동에 대한 지지가 낮아져 정책집행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있다(Gamson, 1968; Miller, 1974; Chanley, 2000; Hetherington & Globetti, 2002). 또한, 정부신뢰가 높을 때 정부는 강제력 없이 국민들의 지지와 순응을 얻을 수 있다(Levi, 1997; Scholz & Lubell, 1998; Marien & Hooghe, 2011). 이외에도 이현우(2013)의 연구에서는 복지정책 수행 기관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신뢰할수록 개인이 복지확대를 지지함을 규명하였다. 박현신(2021)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노령연금 등의 분야에서 정부신뢰가 정부지출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복지정책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복지태도를 결정하도록 돕기 때문에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작용한다.

3. 소결

복지태도는 복지확대나 복지정책의 형성에 있어 주 변수로 인정되고 있다(Taylor-Gooby, 1985; 류진석, 2004; 류만희・최영, 2009). 복지태도와 관련한 연구들은 초반에는 권력자원론을 기초하여 계급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가 많았으나, 계급의 설명력이 유효하지 않다는 여러 연구들이 나오면서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하여 자기이해 요인을 포함한 연구들이 나왔다. 이때, 자기이해 요인에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학적 요인 그리고 사회보험 관점 요인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그리고 사회경제학적 요인에는 소득, 교육수준이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관점 요인이 있다. 그러나 자기이해 요인 또한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연구자들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치관 요인에 집중하게 되었다. 가치관 요인은 정치성향, 다문화수용성, 정부신뢰 등이 포함된다.

<표 2-1>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계급 요인	자기이해 요인			가치관 요인		
하위 요인	계급	인구 학적 요인	사회 경제 학적 요인	사회 보험 관점 요인	정치 성향	다문화 수용성	정부 신뢰

특히, 다문화수용성은 현대 복지국가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주목해야 하는 요인이다. 다문화사회로 들어가게 되면서 외집단에 대한 위협인식으로 인해 반복지태도를 보이게 되는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

다. 이때, 다문화수용성은 외집단에 대한 위협인식을 보여주는 척도로서 사용될 수 있고, 위협인식을 낮게 인지하는 개인은 다문화수용성이 높아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재분배에 대한 태도 및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정부신뢰 또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지각하는 위협이 클수록 정부신뢰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therington, 2005; Rudolph, 2009). 다문화수용성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이 소수집단, 즉 외집단에 대해 지각하는 위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개인의 정부신뢰가 높다면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부신뢰가 어떤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다문화수용성

1. 다문화수용성 정의

다문화주의는 인종・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동일한 정치체제(Polity)에 함께 조화를 이루되 각각의 문화적 고유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문화를 존중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여러 문화의 평등한 공존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강화된 보편주의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장신재, 2020). 다문화 수용성은 이러한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출발하였는데, 우리 사회가 다양한 소수집단, 인종을 수용하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다문화 수용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개방성을 기반하여 타집단을 수용하려는 개인일수록 보편적 가치에 관심이 높아진다(조정하・김성한, 2018). 이는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외집단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들을 존중 및 수용하는 태도는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행하도록 돕기 때문에 다문화수용성은 복지국가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이질성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은 정부의 복지지출과 재분배 정책에 대한 개인의 복지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Goodhart, 2004; Soroka et al., 2006).

일반적으로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국외 연구들은 다문화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타집단에 대한 친밀감 및 고정관념 없이 수용하는 개방적인 태도 등으로 주로 다문화수용성을 파악하였다(Verkuyten & Thijs, 2002; Zirkel, 2008; Edmonds & Killen, 2009). 국내 연구자들이 정의한 다문화 수용성도 비슷하다. 다문화수용성을 ‘서로 다른 인종・언어・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편견을 갖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 및 수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황정미, 2010; 윤인진·송영호, 2011; 민무숙 외, 2012; 허윤철 외, 2017; 곽윤경, 2020; 장신재, 2020; 강서윤・전희정, 2022; 최미경・공계순, 2022). 구체적으로, 황정미(2010)는 이주민을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공동체에 초래되는 부정적 변화나 위협을 인지하는 것과 같이 두 차원으로 나누어 다문화수용성을 개념화하였다. 윤인진・송영호(2011)는 다문화수용성을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및 다른 인종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민무숙 외(2012)는 '이타적 문화나 구성원에 대한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공존하도록 노력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허윤철 외(2017)는 다문화수용성을 '이주민을 선주민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하였으며, 곽윤경(2020)은 '선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이주민과 공존하면서 동시에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태도 혹은 인식'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장신재(2020)는 '다원화된 사회 구성원 중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양성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다문화수용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강서윤・전희정(2022)은 '이민자 집단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 및 수용하는 정도', 최미경・공계순(2022)은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의 정의를 참고하여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정의하는 다문화수용성을 종합했을 때,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을 '다양한 인종과 문화 배경을 가진 사회집단에 대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 정도'로 정의한다.

2. 집단위협이론: 다문화수용성과 복지태도

집단위협이론은 내국인이 소수집단, 외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기존의 권력, 자원, 이익 등이 침해받는다 느끼고 두려움을 가져 방어기제를 발동하여, 부족한 자원을 둘러싼 투쟁이 집단 간의 위협과 갈등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한다(Blalock, 1967). 예를 들어, 내국인은 소수집단, 즉 외국인을 경제·문화적 자원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인식된 위협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개인이 본인의 사회적 지위에 위협을 느낄 경우, 이민자의 복지 혜택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다(Van der Waal et al., 2013; van Oorschot & Uunk, 2007). 이들이 소수집단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소수집단의 유입으로 인한 인지되는 무질서의 증가와 주민들 간의 유대감 약화와 같은 부정적 결과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노성훈, 2013). 이러한 집단위협이론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복지국가가 직면한 과제의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모든 사회적 계층과 집단을 포함하는 것으로(Lijphart, 1999; Kirchner et al., 2011), 계층분열을 해소하는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여 시민 간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Crepaz & Damron, 2009; Rothstein & Stolle, 2008). 따라서 보편적 복지국가는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연대를 촉진하는 것이 그 목적에 맞는 역할이다(Van der Waal et al., 2013). 그러나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복지국가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집단과 인종이 들어오면서 외집단에 대한 위협인식이 복지연대를 감소시키고 재분배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Emmenegger & Klemmensen, 2013). 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집단 내 동질성을 선호하고 다른 집단 구성원들에 대해 더 강한 혐오와 불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Uslaner, 2012). 개인들이 내집단(같은 인종, 문화 또는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선호하고 외집단에 대한 재분배를 덜 선호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Alesina et al., 2021).

이는 집단위협이론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소수집단과 다수집단 간 관계에서 새로운 인종 및 문화접촉이 위협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외집단에 대한 경계 및 혐오를 개인들이 표현하게 된다(Blalock, 1967).

이러한 위협인식이 복지태도와 관련이 있음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이민 비율이 높을수록 소수집단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아져 자국 내 복지 분배에 대한 지지가 감소된다(Emmenegger & Klemmensen, 2013; Mau & Burkhardt, 2009; Van der Waal et al., 2013; van Oorschot & Uunk, 2007). 다문화수용성을 '다양한 인종과 문화 배경을 가진 사회집단에 대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 정도'로 정의할 때, 집단위협이론에 따르면 외국인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사람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반복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Roemer & Van der Straeten(2005, 2006)은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경우, 재분배에 대한 태도가 낮음을 발견했다. 또한,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개인은 경제·문화적 차이를 넘어 연대를 보인다(Goodman & Alarian, 2021).

제 3 절 정부신뢰

1. 정부신뢰 정의

정부신뢰는 정부의 역할 수행에 대한 국민들이 갖는 신뢰로서(류현숙 외, 2011)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Citrin & Green, 1986), 정부 운영에 대한 신념 혹은 판단(Miller, 1974) 등으로 정의된다. 이때, 정부신뢰는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신뢰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르게 함으로써 정부의 정당성을 제고하여 민주적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주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Gamson, 1968; Levi, 1998). 국민의 신뢰를 받은 정부는 정책을 수행할 때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책결정 및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손호중・채원호, 2005). 더불어 정부신뢰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Braithwaite & Levi, 1998; Hetherington, 1998; Mishler & Rose, 2001). 반면에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한 정부는 존속이 어렵고(Miller, 1974),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며 그 정책의 효과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결국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지영・김경아, 2018).

이러한 정부신뢰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었는데, 선행연구에서 다룬 정부신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신뢰에 대하여 Hetherington(1998)은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여 정부가 운용하는지에 대한 평가 혹은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산출물에 대한 평가 ”, Fukuyama(1995)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 협동적, 그리고 정직하게 행동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이헌수(1999)는 “피신뢰자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믿음 혹은 기대”, 박통희(1999)는 “정부에게 가지는 정치적 태도”라고 말하였다. 박천오・박경효(2001)는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추구할 것이라는 의지 및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 오경민・박

홍식(2002)은 “정부를 지지하는 심리적인 태도”라고 설명하였다. 손호중・채원호(2005)는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국민이 정부에 대해 기대하는 태도나 지지”, 이승종(2010)은 “정부에 대하여 국민이 갖는 긍정적 태도”라고 하였으며 이수인(2013)은 “정부의 역량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 정부의 공익성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정부신뢰는 대상에 따라 개념적 정의를 다르게 할 수 있게 된다. 정부신뢰의 대상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까지 포괄하여 정부신뢰를 정의하는 경우가 있으며(Nye et al., 1997; Keele, 2007; 배귀희・임승후, 2009; 권혁빈, 2013), 이와 달리 행정부의 제도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부신뢰 대상을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Christensen & Laegreid, 2002; Yang & Holzer, 2006; 서문기, 2001; 권혁빈, 2013: 김홍주, 2016).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를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제도와 역할 수행에 대하여 국민들이 가지는 태도와 이에 응하여 운영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정부신뢰와 복지태도

복지정책은 정치·경제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복지에 대한 인식 등의 영향을 받으며 재원마련부터 정책수행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정책에 비해 사회적 합의가 더욱 필요하다. 이때, 정부신뢰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하고(Miller, 1974)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며(Gamson, 1968; Levi, 1998) 형평성 있는 정책집행을 하게 함으로써 복지정책 수립 및 확대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돕는다(Brooks & Manza, 2006).

복지확대의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장·단기적 이익, 그리고 개인적 및 사회적 이익 사이에서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된다(김신영, 2010). 이때, 개인은 자신의 장·단기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 및 비용을 감안하여 복지 태도를 결정한다. 그러나 각 개인에게 '자기피해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정부에 대한 믿음(Mayer et al., 1995)'이 있다면, 본인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복지정책을 수용하고 지지하게 된다(최고은, 2016). 즉, 정부신뢰가 복지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조절변인의 역할을 한다(Dirks & Ferrin, 2001).

정부신뢰는 개인의 가치관과 정부 정책 간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서 논의되어 왔다. 강혜진(2018)은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정부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을 밝혔다.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보육 및 양육료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혜 가능성이 없는 개인은 반복지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나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반복지적 태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etherington, 2005; Rudolph & Evans, 2005; Hetherington & Rudolph, 2011). 또한, 정부신뢰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저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임재영·문국경, 2019). 금현

섭・백승주(2010)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 보수적일수록 정부의 정책지지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으나, 정부신뢰가 이를 조절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고은(2016)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물질적 희생이 증가한 개인은 복지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보일 때, 정치신뢰가 이를 조절함을 말하고 있다.

특히,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는 불확실성과 취약성이 높은 상황 및 환경에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신뢰를 토대로 개인은 본인의 위험 및 희생을 감수하며 정책을 지지하게 된다. 이때, 개인이 정부신뢰에 따라 감내하게 되는 희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책지지를 표명할 때 발생하는 물질적 희생이다(Hetherington, 2005). 정책유형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과 편익의 귀착범위가 달라지는데,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은 편익보다 비용이 큰 상황에서 희생을 부담하고 정책을 지지하게 한다. 사회보장, 범죄예방, 환경보호, 국방과 같은 배분정책의 지출증가에서는 정부신뢰에 따른 정책지지의 차이가 있지 않았지만, 복지정책, 푸드스탬프, 빈민구제정책과 같은 재분배정책의 지출증가에 대한 지지에서는 정부신뢰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보여주고 있다(Hetherington, 2005). 둘째, 해당 정책의 이념적 지향과 개인이 갖고 있는 이념성향이 불일치하더라도 정책지지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념적 희생이 존재한다(Sears & Citrin, 1982; Huckfeldt et al, 1999; Lupia et al., 2007). 정부신뢰가 정책유형에 상관없이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를 정부신뢰가 조절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Rudolph & Evans, 2005) 그 후속 연구에서는 감세에 대한 태도에 정부신뢰가 조절효과로서 작용하고 있다(Rudolph, 2009).

정리하면,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불확실한 정책 환경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념 성향 또는 물질적 이익을 희생하면서도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가치관과 정책태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신뢰가 조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4 절 기존 연구의 한계

위의 논의를 정리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지금까지 복지태도와 관련한 국내 연구들은 계급 요인, 자기이해 요인과 관련한 변수들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으며(류만희・최영, 2009; 이아름, 2010; 김영순・여유진, 2011; 이훈희 외, 2011; 윤도현, 2013; 김병섭・강혜진, 2015; 전희정・서동희, 2015; 허수연・김한성, 2016; 안상훈 외, 2021), 가치관 요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치이념, 소득재분배 인식, 사회적 호혜인식, 신뢰, 기회공정성 등과 같은 변수를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이현우, 2013; 김윤태 외, 2013; 이승주・박소영, 2019; 장승진, 2017; 김형관・이상록, 2019; 이미숙, 2020). 그러나 해외 선행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진행된 것과는 달리(Senik et al., 2009; Finseraas, 2008; Garand et al., 2017; Burgoon & Rooduijn, 2021; Haselswerdt, J., 2021) 국내 연구에서는 가치관 요인 중 다문화수용성이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것에 비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권정만・김학만(2015)의 연구의 경우,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복지 인식을 탐구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분석방법의 한계로 인해 다문화수용성과 복지태도의 인과성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신뢰, 사회적 수용, 사회적 소통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조정하・김성한(2018)의 연구의 경우, 사회적 수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수용도와 복지태도 간의 관계를 보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용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변수 구성에 가치관 요인과 자기이해 요인 변수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정부신뢰가 복지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음과 동시에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파악한 연구 또한 거의 부재하다. 특히 국내 연구 중 정부신뢰와 정책지지 및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로는, 전반적인 정부지출 지지에 정부신뢰의 역할을 분석한 금현섭・백승주(2010)의 연구,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고은(2016)의 연구, 복지확대와 증세에 대한 상반된 태도와 관련한 결정요인을 탐구한 남윤민(2018)의 연구, 신뢰, 사회적 수용, 사회적 소통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조정하・김성한(2018)의 연구, 복지정책의 인식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영향을 탐구한 이승주・박소영(2019)의 연구, 복지에 대한 이념적 성향이 바뀔 수 있는 기제로 정치신뢰의 함의를 제시한 임재영・문국경(2019)의 연구, 11개의 정책분야에 대한 정책태도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분석한 박현신(2021)의 연구 정도만이 있을 뿐이다. 이때,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파악한 연구로는 최고은(2016)의 연구와 이념과 복지태도에 대한 영향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파악한 임재영・문국경(2019)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최고은(2016)의 연구의 경우, 복지태도를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로만을 설정했다는 한계와 임재영・문국경(2019)의 연구는 변수 구성에 자기이해 요인 및 가치관 요인만을 포함했다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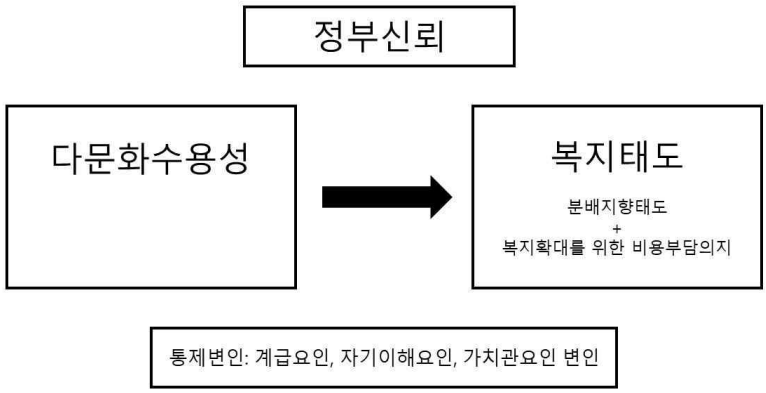
요약하면,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대해 탐구하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고 그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신뢰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존재하였으나, 개인의 가치관과 복지태도 간의 관계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밝혀낸 연구는 거의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그동안 이 세 가지 변수들의 관련성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과 복지태도, 정부신뢰와 복지태도, 그리고 정부신뢰가 다문화수용성과 복지태도를 조절하는 관계성을 고려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개인의 다문화수용성과 복지태도 그리고 정부신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의 복지정책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이해를 돕고, 대응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연구영역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복지태도의 다문화수용성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복지태도에 '분배지향태도'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를 포함한 분석모형을 구성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부신뢰가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복지태도에서 다문화수용성이 가지는 영향이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조절되어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의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가설

연구의 문제로 제시하였던 1)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정부신뢰가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신뢰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가설 1-1. 다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 분배지향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1-2. 다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문제 2.] 정부신뢰가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가설 2-1.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분배지향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2-2.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문제 3.]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신뢰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가?

연구 가설 3-1. 정부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분배지향태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의 크기가 강화될 것이다.

연구 가설 3-2. 정부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정(+)적 영향의 크기가 강화될 것이다.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실태조사(2021년)에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2차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21)에 따르면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8년부터 실시된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17001호)다. 행정연구원은 2012년 ‘사회갈등, 사회통합에 대한 실태조사’, ‘공정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3년부터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매년 조사 및 공표 중이다. 이 조사는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설문조사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사회영역별로 파악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대통합에 기여할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자는 2021년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로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어 총 표본의 수는 8,077명이다. 조사는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조사하는 대면면접조사 방법을 실시하여 결과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CAPI 조사를 도입하여 대면이 어렵거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기입조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표본추출단위는 1차적으로 각 시·도 내에서 조사구를 추출하며, 2차 추출단위는 조사구 내의 가구, 3차 추출단위는 가구 내 조사대상 개인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계통추출방법인 다단계층화확률비례 추출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표본추출틀은 2019년 등록센서스(통계청)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설정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권리부여),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사회적 포용), 사회보장에 대한 문항을 포함한다. 복지태도 관련 연구는 주로 '한국복지패널조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복지패널조사는 빈곤층, 차상위계층의 경제상황과 복지수요를 조사하는 목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을 50%로 할당하고 있어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이미숙,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는 복지태도와 관련한 연구에서 쓰인 적이 거의 없었으나, 일반시민들의 사회통합관련 인식들을 물어 사회복지와 관련하여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라 과대추출 없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합당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 질문과 적절히 관련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고, 모집단인 한국의 전체가구를 대표하는 자료이며 표본의 수가 8,077명이라는 점에서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분석방법 및 변수설명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문화수용성이 정부신뢰를 조절효과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이다. 이를 규명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IBM SPSS 26.0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료의 결측치 및 이상치를 확인하고, 연구대상 및 주요변수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다.

둘째, 독립변수(다문화수용성), 종속변수(복지태도), 조절변수(정부신뢰)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하였다.

셋째, 다문화수용성, 정부신뢰가 분배지향태도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통제변수와 다문화수용성, 정부신뢰를 포함하는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정부신뢰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종 통제변인과 다문화수용성, 정부신뢰를 투입한 다음, 다문화수용성과 정부신뢰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1].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단계에서 총괄 F 검증(omnibus F

1)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의 방향(direction)또는 강도(strength)에 영향을 주는 정성적 또는 정량적 변수를 의미한다(Baron & Kenny,

test)을 통해 R^2의 변화량의 유의수준을 확인하여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려 한다(Frazier et al., 2004). 이때, 연속변인으로 이루어진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원자료 값으로 상호작용항을 구성할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며, 추정치의 왜곡과 검증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Frazier et al., 2004). 이에 독립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상호작용항 간의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평균집중화(Mean Centering)화 한 후, 평균 집중화한 두 값을 각각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모형 설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복지태도를 '분배지향태도'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를 포함하여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각 분석모형에서는 총 4단계 모형을 구성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던 계급 요인, 자기이해 요인, 가치관 요인을 1단계에 투입하였고, 이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문화수용성을 2단계에 투입하였으며, 각종 통제변인 및 다문화수용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부신뢰를 3단계에 투입하였고, 4단계에서는 동일한 조건 하에 다문화수용성, 정부신뢰, 이들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추가로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복지태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도록 한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이후의 설명력(R^2)이 투입하기 이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위의 연구모형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단계: $Y = \alpha + \gamma_1 D + \mu$

(Y= 복지태도, D= 통제변인, α =상수 u=오차)

2단계: $Y = \alpha + \beta_1 X + \gamma_1 D + \mu$

(Y= 복지태도, X= 다문화수용성, D= 통제변인, α =상수 u=오차)

1986).

3단계: $Y = \alpha + \beta_1 X + \beta_2 W + \gamma_1 D + \mu$

(Y= 복지태도, X= 다문화수용성, W= 정부신뢰, D= 통제변인, α =상수 u=오차)

4단계: $Y = \alpha + \beta_1 X + \beta_2 W + \beta_3 XW + \gamma_1 D + \mu$

(Y= 복지태도, X= 다문화수용성, W= 정부신뢰, D= 통제변인, α =상수 u=오차)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복지태도는 복지제도를 둘러싼 태도, 가치, 행동지향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재분배나 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한 동의나 의견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를 '분배지향태도'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저점수(0점)부터 최대점수(20점) 중 총점이 높을수록 개인이 친복지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려 한다.

'분배지향태도'는 개인이 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기보다 사회적 배제의 축소, 차별이나 불평등의 감소 즉, 사회의 모든 구성원 간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태도(한국행정연구원, 2021)를 의미한다. '분배지향태도'는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성장이 더 중요하다(0점)'부터 '분배가 더 중요하다(10점)'까지 11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분배지향적인 태도로 해석한다.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는 복지재정확대에 대한 동의 및 복지확대를 위한 조세부담의사를 묻는 것으로 복지에 대한 지지 견해와 함께 재정적 지불능력을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는 "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에 대하여 '전혀 없다(0점)'부터 '매우 많다(10점)'까지 11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 의지가 높은 것이다.

2) 독립변수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것은 타인에 대해 개방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며, 개방적인 자세를 통해 다른 구성원을 존중 및 수용하여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조정하・김성한, 2018).

본 연구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 배경을 가진 사회집단에 대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 정도'로 다문화수용성을 정의한다. 다문화수용성은 "귀하는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0점)'에서 '매우 동의한다(10점)'까지 11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3) 조절변수

정부신뢰는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최고은, 2016). 또한, 보수주의자의 경우 즉, 복지확대에 위협을 더 많이 느끼는 집단일 경우 정부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보다 완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임재영・문국경, 2019).

본 연구는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제도와 역할 수행에 대하여 국민들이 가지는 태도와 이에 응하여 운영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정부신뢰를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으로 유능한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Barber, 1983)인 '기능적 신뢰'를 기반하여 정부신뢰를 측정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정책에 대한 정부신뢰는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에 대하여 '전혀 믿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믿는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

도로 질문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신뢰를 행정부 내지는 중앙정부 부처에 대한 단일 기관신뢰 변수로 조작화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들의 신뢰가 정책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변수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정부신뢰는 17개의 기관신뢰 변수에 대해서 탐색적 주요인분석(explanatory principal factor analysis) 결과 추출된 요인을 사용하였다. 이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1 이상의 요인이 두 개 추출되었다. 추출된 두 개의 요인 중 '정부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에 대한 신뢰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이 요인을 정부신뢰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5문항의 점수를 평균화하여 최저점수(1점)부터 최대점수(4점)가 나올 때, 총점이 높을수록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정책에 대한 기능적 신뢰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4) 통제변수

(1) 계급 요인

일반적으로 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위치를 차지하는 집단들로 규정지을 수 있다(Wright, 1985; 김영순・여유진, 2011 재인용). 이에 따라 통계분석에서 계급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 많이 활용하는 변수가 직종이다. 복지태도 연구에서 활용되는 계급 개념에는 생산관계에서의 위치가 강조되어 직업 또는 직종을 이용하고 있다(Svallfors, 2004; 김영순・ 여유진, 2011; 김희자, 2013).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쓰인 11개의 직종 구분을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전문직(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사무판매직(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농림어업(농림어업 종사자)/기능조립직(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단순노무직(단순노무종사

자)/비경제활동인구의 6개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다만, 계급 변인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설명력이 약하다는 우려가 있어 계층 변수도 함께 사용하였다. 계층 개념에는 소득 격차 등의 현상적 불평등이 부각되어(장귀연, 2013) 일반적으로 소득수준, 경제활동상태 등이 대리변수로 활용된다(주은선・백정미, 2007; 류만희・ 최영, 2009; 모지환・김행열, 2009; 김윤태 외, 2013; 김사현, 2015). 본 연구에서는 계급 변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계층 대리 변수로서 고용지위를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자기이해 요인

자기이해 요인 변수로는 크게 3가지 요인별로 통제변수를 구성하였다.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변수를, 사회경제학적 요인으로는 소득, 교육수준 변수를 넣었다.

①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친복지적 성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Edlund, 1999; Blekesaune & Quadagno, 2003; 이훈희 외, 2011), 최근 연구에서는 성별 변수의 통계적 유의도와 방향성은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김희자, 1999; 조돈문, 2001; 백정미 외, 2008; 권승, 2012; 김윤태 외, 2013). 또한, 연령의 경우도 젊은 연령대일수록 복지국가 지지도가 높다는 연구결과(Van Oorschot, 2002)가 있는 반면 노년층일수록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복지확대에 찬성한다는 주장도 있다(Blekesaune & Quadangno, 2003). 연령 또한 성별처럼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② 사회경제학적 요인(소득수준, 교육수준)

저소득층은 복지 수혜자, 고소득층은 복지 납세자로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재분배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 복지증세를 더 찬성하며 중간층은 복지확대는 찬성해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는 결과도 제시되어 왔다(이성균, 2002; 류진석, 2004; 류만희・최영, 2009; 김신영, 2010; 김영순・여유진, 2011; 김희자, 2013; 황아란・이지호, 2015). 교육수준은 교육을 통해 획득된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복지태도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Derks, 2004).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 확대 및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병섭・강혜진, 2015).

(3) 가치관 요인(정치성향)

가치에 기반을 둔 이론은 개인이 유지해온 신념 혹은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가치관에 주목한다. 개인의 복지태도는 본인이 일관되게 유지한 이념적 성향이나 가치관에 의해 형성된다는 가정 아래, 해당 논의들은 개인의 복지태도의 근거를 정치성향 등에서 찾고 있다(이중섭, 2009; 이아름, 2010; Craig et al., 2006; Rudolph & Evans, 2005; Blekesaune & Quadagno, 2003). 보수적인 정치이념일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을 반대하는 경향은 계속해서 확인되었다(Rudolph & Evans,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수 - 진보 간 스펙트럼에서 발견되는 정치성향(“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으로 나누어 측정하기로 한다.

〈표 4-1〉 변수 조작적 정의

변수명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		복지태도	1) 분배지향태도: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장이 더 중요하다=0, 분배가 더 중요하다=10) 2)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전혀 없다=0, 매우 많다=10)
독립변수		다문화수용성	“귀하는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올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0, 매우 동의한다=10)
조절변수		정부신뢰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중앙정부 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전혀 믿지 않는다=1, 매우 믿는다=4)
통제변수	계급요인	계급	전문직(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판매직(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농림어업 종사자)/기능조립직(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직(단순노무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전문직: 1, 사무판매직: 2, 농림어업: 3, 기능조립직: 4, 단순노무직: 5, 비경제활동인구: 6)
		계층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상용직 임금근로자: 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 고용주/자영업자: 3,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 4)

	자기 이해 요인	성별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 (여성: 0, 남성: 1)
		연령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19~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분류함 (19~20대:0, 30대: 1, 40대: 2, 50대:3, 60대 이상: 4)
		소득수준	월평균 가구소득(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200만원 미만: 1, 200-300만원 미만: 2, 300-400만원 미만: 3, 400-500만원 미만: 4, 500-600만원 미만: 5, 600만원 이상: 6)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순으로 분류 (초등학교 이하:1, 중학교: 2, 고등학교: 3, 대학교 이상: 4)
	가치관 요인	정치성향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보수적:1, 다수 보수적:2, 중도적: 3, 다소 진보적:4, 매우 진보적:5)

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주요변수의 기술분석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5-1>과 같다.

먼저 계급 요인별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무판매직이 4,118명(51.0%)으로 가장 많고, 비경제활동인구가 2,311명(28.6%), 기능조립직이 676명(8.4%), 전문직이 372명(4.6%), 농림어업직이 318명(3.9%), 단순노무직이 283명(3.5%)으로 나타났다. 계층을 보여주는 고용지위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3,550명(44.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가 2,484명(30.7%), 고용주/자영업자가 1,357명(16.8%), 임시/일용근로자가 688명(8.5%)이다.

다음으로, 자기이해 요인을 살펴보자. 성별의 경우, 남성이 4,004명(49.6%), 여성이 4,073명(50.4%)으로 여성이 약간 많았다. 연령의 경우 만 19세 이상 인구를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표본으로 추출했기에 만 19세 미만 조사대상자는 없으며, 만 19세~20대가 1,327명(16.4%), 30대가 1,245명(15.4%), 40대가 1,511명(18.7%), 50대가 1,597명(19.8%), 60대 이상이 2,397명(29.7%)으로 60대 이상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조사부터 조사대상 연령대를 만 19~69세이었던 것을 만 70세 이상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기 때문에 60대 이상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2]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200만원 미만이 1,003명(12.4%),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952명(11.8%),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1,145명(14.2%), 400만원~500만원 미만

2) 실제로 65세 이상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1,543명이었다. 본 연구의 60대 이상에는 1,543명이 포함되어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1,238명(15.3%), 500만원~600만원 미만이 1,478명(18.3%), 600만원 이상이 2,262명(28.0%)으로 나타났으며 6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 조사대상자가 4,009명(49.6%)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3,044명(37.7%), 중학교 졸업이 575명(7.1%),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448명(5.5%)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가치관 요인, 즉 정치성향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자신의 정치성향이 중도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779명(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수가 2,455명(30.4%), 진보가 1,843명(22.8%)으로 연구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중도적인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표 5-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8,077)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계급 요인	계급	전문직	372	4.6
		사무판매직	4,118	51.0
		농림어업직	318	3.9
		기능조립직	676	8.4
		단순노무직	283	3.5
		비경제활동인구	2,311	28.6
	계층	상용근로자	3,550	44.0
		임시일용근로자	688	8.5
		고용주/자영업자	1,357	16.8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	2,484	30.7
자기이해 요인	성별	남	4,004	49.6
		여	4,073	50.4
	연령	19~20대	1,327	16,4
		30대	1,245	15.4
		40대	1,511	18.7
		50대	1,597	19.8
		60대이상	2,397	29.7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003	12.4
		200~300만원	952	11.8
		300~400만원	1,145	14.2
		400~500만원	1,238	15.3
		500~600만원	1,478	18.3
		600만원 이상	2,262	28.0
	교육수준	초졸 이하	448	5.5
		중졸	575	7.1
		고졸	3,044	37.7
		대졸 이상	4,009	49.6
가치관 요인	정치성향	매우 보수	351	4.4
		다소 보수	2,104	26.0
		중도	3,779	46.8
		다소 진보	1,644	20.3
		매우 진보	199	2.5

2. 정부신뢰에 따른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정부신뢰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5-2>와 같다.[3] 전체 연구대상자 8,077명 중 정부신뢰가 낮은 집단은 4,055명, 정부신뢰가 높은 집단은 4,022명이다.

우선 계급 요인을 살펴보면 정부신뢰 낮은 집단의 경우 전문직이 222명(5.5%), 사무판매직이 2,043명(50.4%), 농림어업직이 125명(3.1%), 기능조립직이 345명(8.5%), 단순노무직이 134명(3.3%), 비경제활동인구가 1,186명(29.2%)이었으며 정부신뢰 높은 집단의 경우 전문직이 150명(3.7%), 사무판매직이 2,074명(51.6%), 농림어업직이 193명(4.8%), 기능조립직이 331명(8.2%), 단순노무직이 149명(3.7%), 비경제활동인구가 1,125명(28.0%)으로 두 집단 모두 사무판매직이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계층을 보여주는 고용지위는 정부신뢰 낮은 집단의 경우, 상용임금근로자가 1,781명(43.9%),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 363명(9.0%), 고용주/자영업자가 650명(16.0%),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가 1,261명(31.1%)이고, 정부신뢰 높은 집단의 경우, 상용임금근로자가 1,770명(44.0%),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 323명(8.0%), 고용주/자영업자가 707명(17.6%),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가 1,222명(30.4%)으로 두 집단 모두 상용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자기이해 요인 중 성별은 정부신뢰 낮은 집단의 경우, 남성이 2,114명(52.1%), 여성이 1,941명(47.9%)이었으며 정부신뢰 높은 집단의 경우 정부신뢰 낮은 집단과는 반대로 여성이 2,132(53.0%), 남성이 1,890명(47.0%)로 여성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정부신뢰 낮은 집단의 경우, 19~20대가 671명(16.6%), 30대가 689명(17.0%), 40대가 742명(18.3%), 50대가 813명(20.0%), 60대 이상이 1,140명(28.1%)이었으며, 정부신뢰 높은 집단의 경우 19~20대가 656명(16.3%), 30대가 557명

3) 정부신뢰는 4점 척도로서, 각 기관들의 신뢰정도를 평균화한 것을 1~2.5점까지를 정부신뢰 낮은 집단, 2.5~4점까지를 정부신뢰 높은 집단으로 나눠 정부신뢰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13.8%), 40대가 769명(19.1%), 50대가 784명(19.5%), 60대 이상이 1,257명(31.3%)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 60대 이상의 비중이 높았다. 소득수준은 정부신뢰 낮은 집단의 경우 200만원 미만이 449명(11.1%),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470명(11.6%),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591명(14.6%), 400만원~500만원 미만이 663명(16.3%), 500만원~600만원 미만이 772명(19.0%), 600만원 이상이 1,110명(27.4%)이었으며, 정부신뢰 높은 집단의 경우 200만원 미만이 554명(13.8%),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482명(12.0%),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554명(13.8%), 400만원~500만원 미만이 575명(14.3%), 500만원~600만원 미만이 705명(17.5%), 600만원 이상이 1,152명(28.6%)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600만원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4] 교육수준은 정부신뢰 낮은 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207명(9.1%), 중학교 졸업이 275명(6.8%), 고등학교 졸업이 1,517명(37.4%), 대학교 졸업 이상이 2,056명(50.7%)이며, 정부신뢰 높은 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242명(6.0%), 중학교 졸업이 300명(7.5%), 고등학교 졸업이 1,527명(38.0%), 대학교 졸업 이상이 1,953명(48.6%)으로 두 집단 모두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중이 가장 많다.

끝으로 가치관 요인 중 정치성향의 경우, 정부신뢰 낮은 집단에서 중도가 1,903명(47.6%), 보수가 1,267명(31.3%), 진보가 857명(21.1%)이며, 정부신뢰 높은 집단에서 중도가 1,849명(46.0%), 보수가 1,188명(29.5%), 진보가 906명(24.5%)으로 두 집단 모두 중도 성향의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600만원 이상 비중이 전체 응답자 중 28.0%인 것도 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5-2> 정부신뢰에 따른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구분	집단특성		정부신뢰 낮은 집단 (n=4,055)	정부신뢰 높은 집단 (n=4,022)	전체 (n=8,077)
			N(%)		
계급 요인	계급	전문직	222(5.5)	150(3.7)	372(4.6)
		사무판매직	2,043(50.4)	2,074(51.6)	4,118(51.0)
		농림어업직	125(3.1)	193(4.8)	318(3.9)
		기능조립직	345(8.5)	331(8.2)	676(8.4)
		단순노무직	134(3.3)	149(3.7)	283(3.5)
		비경제활동인구	1,186(29.2)	1,125(28.0)	2,311(28.6)
	계층	상용근로자	1,781(43.9)	1,770(44.0)	3,550(44.0)
		임시일용근로자	363(9.0)	323(8.0)	688(8.5)
		고용주/자영업자	650(16.0)	707(17.6)	1,357(16.8)_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	1,261(31.1)	1,222(30.4)	2,484(30.7)
자기 이해 요인	성별	남성	2,114(52.1)	1,890(47.0)	4,004(49.6)
		여성	1,941(47.9)	2,132(53.0)	4,073(50.4)
	연령	19~20대	671(16.6)	656(16.3)	1,327(16.4)
		30대	689(17.0)	557(13.8)	1,245(15.4)
		40대	742(18.3)	769(19.1)	1,511(18.7)
		50대	813(20.0)	784(19.5)	1,597(19.8)
		60대 이상	1,140(28.1)	1,257(31.3)	2,397(29.7)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449(11.1)	554(13.8)	1,003(12.4)
		200~300만원	470(11.6)	482(12.0)	952(11.8)
		300~400만원	591(14.6)	554(13.8)	1,145(14.2)
		400~500만원	663(16.3)	575(14.3)	1,238(15.3)
		500~600만원	772(19.0)	705(17.5)	1,478(18.3)
		600만원이상	1,110(27.4)	1,152(28.6)	2,262(28.0)
	교육수준	초졸 이하	207(9.1)	242(6.0)	448(5.5)
		중졸	275(6.8)	300(7.5)	575(7.1)
		고졸	1,517(37.4)	1,527(38.0)	3,044(37.7)
		대졸 이상	2,056(50.7)	1,953(48.6)	4,009(49.6)
가치관 요인	정치성향	매우 보수	201(5.0)	150(3.7)	351(4.4)
		다소 보수	1,066(26.3)	1,038(25.8)	2,104(26.0)
		중도	1,930(47.6)	1,849(46.0)	3,779(46.8)
		다소 진보	743(18.3)	901(22.4)	1,644(20.3)
		매우 진보	114(2.8)	85(2.1)	199(2.5)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다문화수용성, 정부신뢰, 분배지향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3>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다문화수용성은 11점 척도로, 평균값은 5.67점으로 우리사회가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가 중간 정도를 상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기능적 신뢰는 4점 척도로, 평균값은 2.46점으로 정부를 신뢰하는 정도가 약간 낮음이 확인되었다. 분배지향태도는 11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값은 5.20점으로 성장지향에 조금 더 가까운 편으로 나타났다.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을 나타내는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는 11점 척도로, 평균값은 5.64점으로 복지확대 비용부담의지가 중간값을 상회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료의 정규성 여부를 확인할 때 참고하는 통계치로는 왜도와 첨도가 있다. 왜도(skewness)는 자료의 대칭성 정도를 나타내며, 첨도(kurtosis)는 정규분포의 곡선에 대해 분포의 중간이나 꼬리에 있는 점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일변량 왜도 지수의 절대값이 3.0보다 큰 경우에는 '극단적인' 왜도라고 인식하며, 일변량 첨도 지수의 절대값이 10보다 클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Hoyle, 1995). 이를 기준으로 주요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왜도는 -0.700~-0.155 분포를 보이나, 첨도의 경우 --0.324~0.181의 분포를 보여 정규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및 정규분포성 검토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다문화수용성	5.67	1.700	-.554	.161
정부신뢰	2.46	.59	-.155	-.324
분배지향태도	5.20	1.700	-.173	-.052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5.64	1.844	-.700	.181

4.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결과

각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및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4>와 같다.

먼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계수, 분산팽창인자(VIF),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 기준인 0.8보다 작게 나타났다. 분산팽창인자와 공차 한계 역시 각각 2.5 이하, 0.4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조절변수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문화수용성은 조절변수인 정부신뢰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r=.045$, $p<.01$). 또한, 독립변수인 다문화수용성은 종속변수로 쓰인 분배지향태도($r=.213$, $p<.01$),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r=.519$, $p<.01$)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드러냈다. 조절변수인 정부신뢰는 분배지향태도($r=-.026$, $p<.05$)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와는 정(+)적 상관관계($r=.020$)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부신뢰는 복지태도에서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활용된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사이에는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계적 회귀분석의 통계적 정당성과 근거를 확보하였다.

〈표 5-4〉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다문화수용성	정부신뢰	분배지향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다문화수용성	1			
정부신뢰	.045**	1		
분배지향태도	.213**	-.026*	1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519**	.020	.211**	1

*p < .05, **p < .01

제 2 절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부신뢰

본격적인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를 통해서 연구대상자들의 각종 특성에 따른 정부신뢰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5-5>와 같다.

우선 정부신뢰와 관련하여 연구대상자들의 태도 차이를 살펴보면(<표 5-5>), 계급, 성별, 연령, 소득수준, 정치성향에 따라 정부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급 요인에서는 농림어업직이 단순노무직에 비해 정부신뢰가 높고, 단순노무직이 그 외 다른 집단에 비해 정부신뢰가 높아, 계급 변인에 따라 정부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6.224$, $p<.001$).

자기이해 요인에서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 정부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고($t=4.633$, $p<.001$),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정부신뢰가 더 높았다($F=5.182$, $p<.001$). 소득수준에서는 2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정부신뢰가 더 높았다($F=4.453$, $p<.001$).

정치성향에 따라서도 분배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7.270$, $p<.001$). 다소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정부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연구대상자 특성별 정부신뢰 차이

구분	집단특성		빈도 (명)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 검정
계급 요인	계급	전문직[a]	372	1.40(.49)	F=6.224***	a<b<c
		사무판매직[a]	4,118	1.50(.50)		
		농림어업직[c]	318	1.61(.49)		
		기능조립직[a]	676	1.49(.50)		
		단순노무직[b]	283	1.53(.50)		
		비경제활동인구[a]	2,311	1.49(.50)		
	계층	상용근로자	3,550	1.50(.50)	F=1.771	-
		임시일용근로자	688	1.47(.50)		
		고용주/자영업자	1,357	1.52(.50)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	2,484	1.49(.50)		
자기 이해 요인	성별	남성	4,004	1.47(.50)	t=4.633***	-
		여성	4,073	1.52(.50)		
	연령	19~20대[a]	1,327	1.49(.50)	F=5.182***	a<b
		30대[a]	1,245	1.45(.50)		
		40대[b]	1,511	1.50(.50)		
		50대[a]	1,597	1.49(.50)		
		60대이상[b]	2,397	1.52(.50)		
	소득수준	200만원미만[b]	1,003	1.55(.50)	F=4.453***	a<b
		200~300만원[a]	952	1.51(.50)		
		300~400만원[a]	1,145	1.48(.50)		
		400~500만원[a]	1,238	1.46(.50)		
		500~600만원[a]	1,478	1.48(.50)		
		600만원이상[b]	2,262	1.51(.50)		
	교육수준	초졸 이하	448	1.54(.50)	F=2.137	-
		중졸	575	1.52(.50)		
		고졸	3,044	1.50(.50)		
		대졸 이상	4,009	1.49(.50)		
가치관 요인	정치성향	매우 보수[a]	351	1.43(.50)	F=7.270***	a<b
		다소 보수[a]	2,104	1.49(.50)		
		중도[a]	3,779	1.49(.50)		
		다소 진보[b]	1,644	1.55(.50)		
		매우 진보[a]	199	1,43(.50)		

*p < .05, **p < .01, ***p< .001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우선 분배지향태도와 관련하여 연구대상자들의 태도 차이를 살펴보면(<표 5-6>), 계층, 교육수준, 정치성향에 따라 분배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급 요인에서는 계층의 경우, 상용임금근로자와 고용주/자영업자 집단이 임시/일용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 집단에 비해 분배지향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12.202, p<.001).

자기이해 요인에서는 교육수준이 분배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집단에 비해 성장보다 분배를 더 지지하였다(F=3.365, p<.05).

정치성향에 따라서도 분배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5.871, p<.001).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진 집단일수록 분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연구대상자 특성별 분배지향태도 차이

구분	집단특성		빈도 (명)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 검정
계급 요인	계급	전문직	372	5.30(1.60)	F=3.164	-
		사무판매직	4,118	5.25(1.66)		
		농림어업직	318	5.28(1.62)		
		기능조립직	676	5.20(1.72)		
		단순노무직	283	5.10(1.71)		
		비경제활동인구	2,311	5.10(1.79)		
	계층	상용근로자[b]	3,550	5.27(1.64)	F=12.202***	a<b
		임시일용근로자[a]	688	4.99(1.80)		
		고용주/자영업자[b]	1,357	5.34(1.65)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a]	2,484	5.09(1.77)		
자기 이해 요인	성별	남성	4,004	5.18(1.70)	t=1.331	-
		여성	4,073	5.23(1.70)		
	연령	19~20대	1,327	5.18(1.62)	F=2.854	-
		30대	1,245	5.23(1.71)		
		40대	1,511	5.08(1.74)		
		50대	1,597	5.26(1.64)		
		60대이상	2,397	5.25(1.75)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1,003	5.23(1.79)	F=.805	-
		200~300만원	952	5.17(1.75)		
		300~400만원	1,145	5.17(1.75)		
		400~500만원	1,238	5.14(1.66)		
		500~600만원	1,478	5.22(1.76)		
		600만원이상	2,262	5.24(1.60)		
	교육수준	초졸 이하[a]	448	4.98(1.66)	F=3.365*	a<b
		중졸[a]	575	5.12(1.84)		
		고졸[b]	3,044	5.22(1.70)		
		대졸 이상[b]	4,009	5.23(1.69)		
가치관 요인	정치성향	매우 보수[a]	351	4.97(2.00)	F=5.871***	a<b<c
		다소 보수[a]	2,104	5.10(1.77)		
		중도[a]	3,779	5.23(1.65)		
		다소 진보[b]	1,644	5.29(1.62)		
		매우 진보[c]	199	5.45(1.95)		

*p < .05, **p < .01, ***p< .001

다음으로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태도 차이를 살펴보면(<표 5-7>), 계급, 계층, 소득수준, 교육수준, 정치성향에 따라 복지비용부담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급 요인에서는 계급의 경우, 전문직이 사무판매직, 기능조립직, 비경제활동인구, 농림어업직에 비해 복지비용부담의지가 높았으며, 단순노무직이 다른 집단에 비해 복지비용부담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24.363, p<.001). 계층의 경우, 상용임금근로자와 고용주/자영업자 집단이 임시/일용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 집단에 비해 복지비용부담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7.084, p<.001). 이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임시/일용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 집단이 더 낮은 복지비용부담의지를 보이는 태도를 보여준다.

자기이해 요인 중 소득수준은 600만원 이상 집단이 500만원~600만원 미만 집단,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집단보다 비용부담의지가 높고, 200만원 미만 집단이 비용부담의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20.322, p<.001).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집단보다 복지재원부담의 적극성을 보였으며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비용부담의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35.302, p<.001).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등, 연대성, 상호호혜 등 복지국가 가치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기에 복지확대에 대한 비용부담에도 수용하는 태도가 높은 경향이 발견된다.

가치관 요인인 정치성향에 따라서도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29.747, p<.001).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서도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진 집단은 분배지향적 태도와 더불어 적극적인 복지비용부담수용성을 보였다.

<표 5-7> 연구대상자 특성별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구분	집단특성		빈도 (명)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정
계급 요인	계급	전문직[c]	372	6.20(1.53)	F=24.363***	a<b<c
		사무판매직[b]	4,118	5.77(1.84)		
		농림어업직[b]	318	5.45(1.59)		
		기능조립직[b]	676	5.54(1.85)		
		단순노무직[a]	283	4.98(1.86)		
		비경제활동인구[a]	2,311	5.45(1.88)		
	계층	상용근로자[b]	3,550	5.82(1.80)	F=27.084***	a<b
		임시일용근로자[a]	688	5.41(1.70)		
		고용주/자영업자[b]	1,357	5.66(1.94)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a]	2,484	5.42(1.87)		
자기 이해 요인	성별	남성	4,004	5.67(1.87)	t=-1.577	-
		여성	4,073	5.61(1.82)		
	연령	19~20대	1,327	5.69(1.81)	F=1.384	-
		30대	1,245	5.67(1.86)		
		40대	1,511	5.69(1.77)		
		50대	1,597	5.61(1.89)		
		60대이상	2,397	5.58(1.87)		
	소득수준	200만원미만[a]	1,003	5.23(1.89)	F=20.322***	a<b<c
		200~300만원[b]	952	5.60(1.78)		
		300~400만원[b]	1,145	5.53(1.84)		
		400~500만원[b]	1,238	5.52(1.83)		
		500~600만원[b]	1,478	5.76(1.90)		
		600만원이상[c]	2,262	5.87(1.78)		
	교육수준	초졸 이하[a]	448	5.03(1.81)	F=35.302***	a<b<c
		중졸[b]	575	5.33(1.87)		
		고졸[b]	3,044	5.56(1.82)		
		대졸 이상[c]	4,009	5.81(1.84)		
가치관 요인	정치성향	매우 보수[a]	351	5.08(2.08)	F=29.747***	a<b<c<d
		다소 보수[a]	2,104	5.41(1.93)		
		중도[b]	3,779	5.67(1.80)		
		다소 진보[c]	1,644	5.90(1.71)		
		매우 진보[d]	199	6.23(1.70)		

*p < .05, **p < .01, ***p< .001

제 3 절 가설검증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의 하위범주인 '분배지향태도'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를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여 2가지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다문화수용성과 정부신뢰가 종속변수인 복지태도(분배지향태도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주효과 및 정부신뢰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들을 점검한 결과, 본 연구 모형들은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통계치는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모형의 각 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는 2.5 이하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 모형1: 분배지향태도

모형 1: $Y_1 = \alpha_1 + \beta_1 X + \beta_2 W + \beta_3 XW + \gamma_1 D + \mu_1$

(Y_1= 분배지향태도, X= 다문화수용성, W= 정부신뢰, D= 통제변인, α_1=상수, u_1=오차)

우선, [모형 1-1]에서 분배지향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계층, 성별(β=-.140, p<.01), 연령(β=.055, p<.01), 정치성향(β=.114, p<.001)으로 나타났으며 계급, 소득수준, 교육수준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계급 요인에서 계층 변수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상용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배

지향태도를 보였다. 자기이해 요인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분배지향태도에 긍정적 입장을 가졌다. 이에 대해 남성보다는 여성이(Edlund, 1999; Blekesaune & Quadagno, 2003, 이훈희 외, 2011), 연령이 높을수록(Bonoli &Häusermann, 2009; Ahn & Kim, 2014), 전반적인 복지친화적 인식이 더 강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음을 알 수 있다. 가치관 요인에서 정치성향과 관련해서 진보적 정치견해를 가질수록 분배지향태도를 보였다. 정치성향의 경우, 기본적으로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 혹은 통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여(김경미, 2009) 민주적 원리와 이윤 공유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안상훈・조영민, 2022)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이 분배지향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통제변수와 다문화수용성을 투입한 [모형 1-2]을 설정하였다. [모형 1-2]에서 다문화수용성은 분배지향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β=.209, p<.001). 즉, 다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 분배지향적 태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연구가설 1-1]은 지지되었다. 이는 외집단에 대해 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을수록 복지재분배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복지재분배가 복지 수급의 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복지국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약화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부신뢰의 주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문화수용성과 각종 통제변인을 투입한 상황에서 정부신뢰가 분배지향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모형 1-3]을 살펴보았다. [모형 1-3]에서 정부신뢰는 분배지향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β=-.073, p<.001). 이는 정부신뢰가 증가할수록 분배지향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1]을 기각하며,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Scholz & Pinney, 1995; Scholz & Lubell, 1998; Jimenez & Iyer, 2016; 문승민・최선미,

2019)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인다. 1년 전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정부신뢰가 분배지향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던 2020년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부록 1: 표 1-8> 참고)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신뢰가 높은 집단과 정부신뢰가 낮은 집단, 각각의 집단 내에서 이질성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표 5-5>의 연구대상자 특성별 정부신뢰 차이를 볼 때, 2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정부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성향 변수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이 가장 낮은 정부신뢰 평균을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은 가장 높은 정부신뢰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연령변수에서도 40대, 60대 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정부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50대는 30대 다음으로 낮은 정부신뢰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신뢰가 높은(낮은) 집단 내에 층화가 존재하면서 각 집단 내의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강한 특성이 본 연구 결과가 2020년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게 하고,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보이도록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정부신뢰는 2차 자료 사용의 한계로 ‘기술적으로 유능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능적 신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 대한 윤리적 신뢰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부신뢰의 문항인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는 기관 자체(정부)에 대한 신뢰로 응답할 수 있고, 혹은 정부를 운영하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 및 자질 등을 포함하여 응답할 수 있어 개별 응답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2차 자료 사용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적 타당성의 저해가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다만, 정부신뢰 계수 값(β=-.073)은 다문화수용성 계수 값(β=.211)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값이 매우 작아 2021년 표본에 따라 정부신뢰가 분배지향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을 때, 그 영향도가 매우 작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다문화수용성과 분배지향적 태도가 정부신뢰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증해보기로 한다. 상호작용 검증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투입한 다음,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단계에서 총괄 F 검증(omnibus F test), 즉 수정된 R^2 변화량이 유의미하다면,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Frazier et al., 2004).

다문화수용성과 정부신뢰 상호작용을 투입한 이후의 [모형 1-4]의 설명력은 5.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Adj.R^2=.055, p<.001), 유의확률 F 변화량은 .000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기에, ΔR^2(설명력 증가량)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어서 개별적인 상호작용항의 유의도를 살펴본 결과, 정부신뢰를 통한 조절효과는 분배지향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β=-.067,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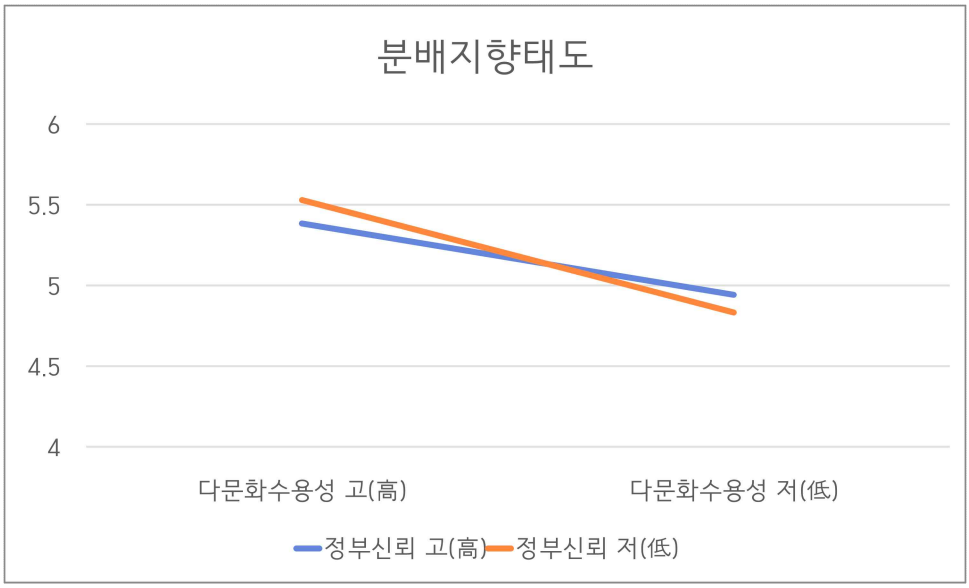
<표 5-8> 모형1: 분배지향태도

변수명		모형 1-1			모형1-2			모형1-3			모형1-4		
		분배지향태도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계급 요인 (계급)	전문직	-.196	.165	.235	-.227	.161	.160	-.252	.161	.118	-.258	.161	.109
	사무판매직	-.218	.137	.113	-.236	.134	.079	-.240	.134	.074	-.240	.134	.074
	농림어업	-.111	.139	.425	-.083	.136	.540	-.068	.136	.616	-.075	.136	.584
	기능조립직	-.215	.152	.158	-.205	.149	.170	-.205	.149	.168	-.208	.149	.163
	단순노무직	-.168	.175	.335	-.080	.171	.641	-.074	.171	.664	-.083	.171	.626
계급 요인 (계층)	상용임금근로자	.397**	.137	.004	.389**	.134	.004	.401**	.134	.003	.398**	.134	.003
	임시일용임금근로자	.086	.148	.560	.083	.145	.566	.085	.145	.558	.085	.144	.555
	고용주/자영업자	.436**	.135	.001	.412**	.132	.002	.421**	.132	.001	.413**	.132	.002
자기 이해 요인	성별	-.140**	.041	.001	-.145***	.040	.000	-.152***	.040	.000	-.149***	.040	.000
	연령	.055**	.016	.001	.053**	.016	.001	.054**	.016	.001	.053**	.016	.001
	소득	-.007	.013	.589	-.015	.013	.250	-.015	.013	.247	-.014	.013	.265
	교육수준	.062	.032	.051	.051	.031	.102	.051	.031	.106	.053	.031	.088
가치관 요인	정치성향	.114***	.023	.000	.079**	.023	.001	.084***	.023	.000	.083***	.023	.000
다문화수용성					.209***	.011	.000	.211***	.011	.000	.210***	.011	.000
정부신뢰								-.073***	.019	.000	-.072***	.019	.000
다문화수용성*정부신뢰											-.067***	.017	.000
상수		4.527			3.530			3.504			3.513		
R^2		.010			.053			.055			.057		
Adjusted R^2		.009			.051			.053			.055		
$\triangle R^2$											.002***		
F		6.330***			32.354***			31.190***			30.219***		

*p < .05, **p < .01, ***p< .001

a. 준거집단은 비경제활동인구

b. 준거집단은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



[그림 5-1] 다문화수용성-분배지향태도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2. 모형2: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모형 2: $Y_2 = \alpha_2 + \beta_4 X + \beta_5 W + \beta_6 XW + \gamma_2 D + \mu_2$

(Y_2=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X= 다문화수용성, W= 정부신뢰, D= 통제변인, α_2=상수, u_2=오차)

우선,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모형 1-1]에서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계급 요인에서 계급 변인, 계층 변인, 자기이해 요인으로는 연령(β=.112, p<.001), 소득수준(β=.055, p<.001), 교육수준(β=.162, p<.001), 가치관 요인으로는 정치성향(β=.232, p<.001)이 있으며, 성별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계급 요인에서 계급 변인의 경우, 사무판매직(β=-.446, p<.01), 기능조립직(β=-.637, p<.001), 단순노무직(β=-.956, p<.001)이 비경제활동인구보다 낮은 비용부담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의 경우, 상용 임금근로자(β=.653, p<.001), 임시/일용 임금근로자(β=.552, p<.01), 고용주/자영업자(β=.530, p<.001) 집단 모두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비용부담의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분배지향태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임시/일용임금근로자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통해 모순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기이해 요인 특성에서 연령과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가졌다. 연령이 높을수록 비용부담의지가 긍정적인 것은 고연령층의 복지수급 경험에 대한 기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손동영, 2015).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용부담의지가 높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결과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다수의 선행연구결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복지증세를 반대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에 대한 지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고소득층이 복지확

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결과와 대비되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복지태도의 비(非)일관성을 보여주며, 저소득층의 복지체험 부족으로 반복지적 태도를 보인다는(김영순・여유진, 2011)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을 수용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류진석, 2004; 안상훈, 2009; 류만희・최영, 2009; 노대명・전지현, 2011)와 부합하며 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계몽된 이타주의'의 영향으로 확인된다(Derks, 2004; 노법래(2014)에서 재인용). 가치관 요인인 정치성향과 관련해서는 진보적 정치견해를 가질수록 비용부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Iversen & Soskice, 2001; Gërxhani & Koster, 2012; 허수연・김한성, 2016)를 지지한다.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통제변수와 다문화수용성을 투입한 [모형 1-2]을 설정하였다. [모형 1-2]에서 다문화수용성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β=.548, p<.001). 즉, 다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 수용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연구가설 1-2]는 지지되었다. 이는 국외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며(Kirchner et al., 2011; Crepaz & Damron, 2009; Marquart-Pyatt & Paxton, 2007), 다양한 집단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가 복지국가의 지출을 긍정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다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 분배를 지향하는 태도를 가지며,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신뢰의 주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문화수용성과 각종 통제변인을 투입한 상황에서 정부신뢰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모형 1-3]을 살펴보았다. [모형 1-3]에서 정부신뢰는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012, p>.05). 이는 정부신뢰가 증가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

부담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2]을 기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가로 분석한 결과(β=.145, p<.001)(<부록 1: 표 1-9> 참고)와 다른 결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해 2021년 결과가 2020년 결과와 같은 패턴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파악해볼 수 있다. <표 5-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에서 600만원 이상 집단이 2020년 표본에서는 16.7%인 것에 반해, 2021년 28.0%로 11.3%p나 늘었으며, 계급변수에서 사무판매직이 2020년 44.9%에서 2021년 51.0%로 6.1%p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계층 변수에서도 상용임금근로자가 2020년 36.3%에서 2021년 44.0%로 7.7%p가 증가하였다. 교육수준 또한, 대학교 졸업 이상이 2020년 40.1%에서 2021년 49.6%로 9.5%p 증가하여 표본의 구성이 2020년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본의 구성은 정부신뢰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정부신뢰의 개념적 타당성의 한계도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문화수용성과 정부신뢰 상호작용을 투입한 이후의 [모형 1-4]은 유의확률 F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ΔR^2(설명력 증가량)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결과(β=.082, p<.001)(<부록 1: 표 1-9> 참고)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며, 2020년 표본과 2021년 표본의 구성의 다름이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정부신뢰는 상황에 따라 변화가 심한 개념이기에,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2021년 국정수행정도 및 공무원 자질에 대한 여러 이슈들과 정치적·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정부신뢰 측정의 비일관성을 가져왔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부신뢰 형성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 국민들의 국정수행평가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데, 국민이 정부정책에 만족할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지고(Zucker, 1986) 불만족할수록 정부 불신이 생긴다(Miller, 1974; 박종민, 1991; 신상준·이숙종, 2016). 이때,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가 포함된다(신상준 외, 2018). 또한, 공무원 자질에 대한 평가(청렴성, 공정성, 민주성)도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Mayer et al., 1995; 오경민・박홍식, 2002; 손호중・채원호, 2005; 정광호 외, 2011; 최예나, 2018).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2021년의 여러 정치・사회 이슈가 국민들의 정부신뢰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가까스로 회복된 일상이 다시 중단되며 국민들에게 무기력함을 주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자금 등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하였으나, 국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또한, 최저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부가 수요 억제에 나서려고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지던 민심을 오히려 자극하였다. 정치적 이슈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추문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선출하는 4・7 재보선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정당에서 첫 30대 당수가 나오는 등 기존 정치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움직임이 보였다. 이처럼 2021년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해(年)로, 정부신뢰 개념이 본 연구에서 탐색하려고 한 정부신뢰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어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파악한다.

<표 5-9> 모형2: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변수명		모형 1-1			모형1-2			모형1-3			모형1-4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계급 요인 (계급)[a]	전문직	-.159	.176	.368	-.240	.152	.115	-.244	.152	.109	-.246	.152	.105
	사무판매직	-.446**	.147	.002	-.495***	.127	.000	-.496***	.127	.000	-.496***	.127	.000
	농림어업	-.317	.149	.034	-.244	.128	.057	-.242	.128	.059	-.245	.128	.057
	기능조립직	-.637***	.163	.000	-.609***	.140	.000	-.609***	.140	.000	-.610***	.140	.000
	단순노무직	-.956***	.187	.000	-.725***	.161	.000	-.724***	.161	.000	-.728***	.161	.000
계급 요인 (계층)[b]	상용임금근로자	.653***	.146	.000	.630***	.126	.000	.632***	.126	.000	.631***	.126	.000
	임시일용임금근로자	.522**	.158	.001	.514***	.136	.000	.514***	.136	.000	.514***	.136	.000
	고용주/자영업자	.530***	.145	.000	.465***	.125	.000	.466***	.125	.000	.463***	.125	.000
자기 이해 요인	성별	-.047	.044	.285	-.060	.038	.117	-.061	.038	.111	-.060	.038	.118
	연령	.112***	.018	.000	.106***	.015	.000	.106***	.015	.000	.106***	.015	.000
	소득	.055***	.014	.000	.035**	.012	.003	.035**	.012	.003	.036**	.012	.003
	교육수준	.162***	.034	.000	.132***	.030	.000	.132***	.030	.000	.133***	.030	.000
가치관 요인	정치성향	.232***	.025	.000	.141***	.021	.000	.142***	.022	.000	.142***	.022	.000
다문화수용성					.548***	.010	.000	.548***	.010	.000	.548***	.010	.000
정부신뢰								-.012	.017	.492	-.012	.017	.503
다문화수용성*정부신뢰											-.029	.016	.077
상수		3.886			1.278			1.274			1.278		
R^2		.036			.286			.286			.287		
Adjusted R^2		.035			.285			.285			.285		
$\triangle R^2$													

F	23.335***	320.891***	215.516***	202.295***

*p < .05, **p < .01, ***p< .001

a. 준거집단은 비경제활동인구

b. 준거집단은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

제 6 장 결 론

제 1 절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복지태도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다문화수용성에 주목하며,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탐색한다. 또한 ‘분배지향태도’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의 상호결합으로 구체화되는 복지태도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경로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의 주효과 모형, 정부신뢰의 주효과 모형, 다문화수용성과 정부신뢰의 상호작용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2021년 수행된「사회통합실태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8,077명의 응답내용이며, 연구가설의 통계적 검증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격적인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계급 요인, 자기이해 요인, 가치관 요인이 ‘분배지향태도’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가치관 요인이 분배지향태도 및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부담의사에 일관되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학적 요인을 포함하는 자기이해 요인 중에서는 ‘연령’만이 분배지향태도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모두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분배지향태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소득수준, 교육수준의 경우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분배지향태도까지는 결정짓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성별,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모순된 복지태도가 발견됨을 볼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자기이해 요인에 따라서는 비(非)일관적이고 모순적인 복지태도가 나타났지만 본인의 정치적 신념과 같은

가치관 요인에 따라서는 일관된 복지태도를 표출되었다. 또한, 계급 요인으로 투입한 계층 관련 더미변수 중 ‘상용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가 준거집단인 비경제활동인구보다 두 모형 모두에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선행연구 결과와 대비되는 결과로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복지태도의 비(非)일관성을 보여준다.

둘째, <연구문제 1>은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수용성이 증가할수록 ‘분배지향태도’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의 상호결합으로 구체화되는 복지태도에 우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연구가설 1-1]과 [연구가설 1-2]는 모두 지지되었다. 특히, 2020년 결과(<부록 1: 표 1-8, 1-9> 참고)에서는 표본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수용성이 ‘분배지향태도’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모든 모형에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한 결과,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문제 1>은 강하게 지지됨을 볼 수 있다.

셋째, <연구문제 2>는 정부신뢰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검증한 다문화수용성 주효과 모형에 정부신뢰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이다. 연구결과, 사회정책에 있어 ‘기술적으로 유능한 정부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인 기능적 신뢰가 높아질수록 ‘분배지향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연구가설 2- 1]과 [연구가설 2-2]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정부신뢰 높은(낮은) 집단 내에서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강하게 보인다는 점, 그리고 표본의 구성이 2020년과 많이 달라졌다는 점과 2020년 결과(<부록 1: 표 1-8, 1-9> 참고)에서는 정부신뢰가 복지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할 때, 정부신뢰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문제 2>가 약하게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연구문제 3>은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신뢰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검증을 위하여 다문화수용

성, 정부신뢰, 다문화수용성과 정부신뢰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을 검증한다. 분석결과,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분배지향태도'에 대한 [모형 1-4]의 R^2 변화량과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도는 각각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대한 [모형 2-4]의 R^2 변화량과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신뢰가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 다문화수용성이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복지태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이해 요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가치관 요인을 포함하는 연구 흐름이 대두되면서, 가치관 요인의 변수를 포함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수용성은 가치관 요인의 하나로서 복지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복지태도 연구에서는 도외시되어 왔다. 해외의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이민자 수용과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국내에서 다문화수용성과 복지태도를 함께 본 연구는 거의 부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치관 요인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계급 요인, 자기이해 요인에 좀 더 초점되었던 기존 연구의 흐름에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외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특히, 표본에 상관없이 다문화수용성이 '분배지향태도'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모든 모형에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한 결과,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다문화수용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 한국 사회 내 이주민(외국인)에 대한 복지갈등이 향후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가운데,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개개인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복지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수용성 향상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근거가 된다.

둘째,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요인으로서 정부신뢰 변수에 주목하여 정부신뢰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복

지태도 영향요인의 기존 경험적 흐름 가운데 가치관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Andreß, & Heien, 2001; Blekesaune & Quadangno, 2003; 이중섭, 2009)는 각 개인이 유지해온 정치적 신념, 이념적 성향 및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가치관에 주목한다. 가치관 요인을 검증한 기존 복지태도 연구들이 복지태도 결정요인으로서 정당 소속감, 정치적 성향 등의 변수에 주목한 반면, 정부신뢰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데는 다소 소홀하였다. 특히, 국내 연구 중 정부신뢰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부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신뢰를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기존 복지태도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를 통해 정부신뢰가 복지정책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중요한 이유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정부신뢰의 확충이 규범적으로뿐 아니라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정책적 함의를 시사하였다.

셋째,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논의를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이론적 함의가 존재한다.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계급,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정치성향이 있음을 밝혔으며 이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Blekesaune & Quadagno, 2003; Rudolph & Evans, 2005; Craig et al., 2006; 이중섭, 2009; 이아름, 2010; 김병섭・강혜진, 2015)를 재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복지태도 연구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치관 요인인 다문화수용성과 정부신뢰를 다룸으로써 그 논의를 심화시켰다. 특별히 다문화수용성과 복지태도를 다룬 선행연구 및 정부신뢰와 복지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로 지적된 변수구성력(최고은, 2016; 조정하・김성한, 2018; 임재영・문국경, 2019)을 극복하고자 계급요인, 자기이해 요인, 가치관 요인을 모두 포괄했다는 점, 그리고 분석방법의 한계(권정만・김학만, 2015)로 인해 다문화수용성과 복지태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으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시도했다는 이론적 의의가 있다.

2. 정책적 함의

1) 친(親)복지태도 확대를 위한 다문화수용성의 중요성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와 그에 따른 포용적 복지국가의 모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다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 복지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결과를 통해 개개인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에 주목해야 할 근거를 도출하였다.

특히, 다수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가설 1-1, 가설 1-2)를 토대로 하였을 때, 외집단에 대한 위협인식은 낮은 다문화수용성으로 이어지며, 이는 복지연대를 감소시키고 재분배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켜 보편적 복지국가와 대치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개개인의 낮은 다문화수용성은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데 있어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복지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에 퍼져있는 위협인식 정도 및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파악하고, 위협인식을 제공하는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함으로써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요청된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외집단이 있어 다른 서구와 다른 양상을 보이며, 중국동포의 경우 정부에서는 해외동포 입장에서 포용하기보다 단순노무인력으로 인정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고 있다(이종두・백미연, 2012). 실제로 아직까지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체류이주노동자와 화교는 배제하고 있기에 이러한 정책과 양상은 각 개인의 다문화수용성 형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포용적 복지국가 형성을 위해 다문화수용성 증진은 더욱 중요해질 목표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과 내국인의 사회적 자본을 높이는

네트워크 형성, 상황적 특수성을 반영한 다문화 중장기 정책 설립 및 교육 실행, 사실적이고 균형잡힌 정보 전달을 위한 대중매체 육성 및 관리 감독 정책, 외국인 혹은 이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내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 자본을 높임으로써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자본을 제시하고 있다(박희봉 외, 2003; 이재철, 2017). 사회적 자본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게 하고(Putnam, 2000), 관용과 배려와 같은 민주적 시민인식의 증진과 함께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기여한다(Skogan & Maxfield, 1981; Taylor & Hale, 1986). 이주민과 함께 하는 동호회 활동 등에 참여한 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이 활동 미참여 집단보다 높다는 결과는 이를 지지한다(김이선 외, 2019). 이때, 본 연구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력하여 각각의 사회적 자본을 높일 것을 제언한다. 2018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국민의 일반적 인식 측면에서의 다문화수용성은 상승은 하고 있으나 실제 외국인과 교류하는 등의 수용성 측면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국인과 다양한 배경,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과의 온・오프라인 교류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실례로 서울 영등포구, 파주시, 안산시 등의 지역에서는 ‘외국인자율방범대’를 꾸림으로써 외국인과 내국인, 지역경찰이 함께 동네 순찰 활동을 하며, 서로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이해 및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중심으로 ‘클린 대림봉사대’를 운영하여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자본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및 교류활동은 외국인 주민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외국인 주민 또한 당당한 지역사회 주체로 활동하여(김영혜・정수빈, 2022) 내국인의 다문화수

용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정부가 함께 이들의 네트워크 및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 및 제도로 구체화하여, 각각의 사회적 자본 증진을 통해 다문화수용성을 높일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현 한국 사회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한 다문화 인식 전환에 대한 중장기정책 목표를 설립하고 그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이주민 집단 간 관계와 사회통합을 주요한 정책의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함을 받아들이는 다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박근수・곽연희, 2013). 반대로, 이주민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치중할 경우,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수용성을 떨어뜨려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한계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결국 사회적 갈등을 키우게 되고 복지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정책 목표를 확실히 명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확실하게 전담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결과, 2018년 다문화교육 참여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이 2015년 다문화교육 참여집단 다문화수용성보다 하락한 결과는 현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 전개 및 방향성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일부분의 태도와 인식만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문화수용성 전반에 고루 효과가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기에(김이선 외, 2019; 강운선, 2014; 안상수 외, 2015)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 이때, 한국 사회의 과도기적 다문화사회로의 이행모습을 포괄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인식 전환의 중장기적 정책 목표를 세우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다문화교육이 다문화수용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일반국민의 다문화교육 참여가 정체되어 있고 다문화교육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점은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를 다문화인식전환에 대한 중장기 정책 목표 설립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목표를 설립했다면, 이 목표를 설립하기 위해 다문화교육의 양적·질적 수준을 모두 높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대상을 청소년뿐 아니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사업주와 농장주, 그리고 초·중·고 학부모 대상과 같이 일반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김영혜·정수빈, 2022), 질 높은 다문화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다문화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설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대중매체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섬세한 사회정책이 요구된다. 대중매체는 외국인, 이주민을 억압하고 차별하게 만드는 위험성과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신동훈·양경은, 2020). 대중매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의 외국인, 이주민을 접한 경험이 이주민을 더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만드는 반면(김이선 외, 2019; Kymlicka, 2013), 대중매체에서 외국인, 이주민을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존재로 재현할 경우 이들에 대한 미디어 수용자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인희·황경화, 2013; 김희상·윤인진, 2017; Abrams et al., 2018).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관련 뉴스의 양이 증가한다고 내국인의 위협인식이 높아져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나, 뉴스의 보도경향(tone)에 따라 개개인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기에(Boomgaarden & Vliegenthart 2009; 정연구 외, 2011; 임양준, 2012) 대중매체는 외국인 혹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만드는데 영향력 있는 생산기구라고 할 수 있다(양은경, 2010).

특히, 아직까지 다문화사회로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주된 접촉 경로가 직접접촉보다는 대중매

체를 통해 얻어지는 간접접촉이 많기 때문에, 대중매체에서 외집단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는 이들에 대한 수용성을 형성하는데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Abrams et al., 2018). 대중매체에서 재현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수용자에게 내면화되는데(채영길, 2010), 미디어가 주는 정보는 집단 간에 집적적인 접촉 경험이 적을 때 외집단에 대한 인식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다(정연구 외, 2011). 2021년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사회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사회적 약자 대변이 대중매체 및 언론에 가장 중요하게 기대하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에서 사실적이고 균형잡힌 정보를 전달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틀에 갇히게 하는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민자에 대해 균형 잡히고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공공 매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정부가 외국인, 이주민을 적응과 동화의 존재로만 인지하기보다 이들도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를 통해 내국인의 다문화수용성도 함께 향상되게 함으로써 포용적인 복지국가로의 방향성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주민을 소수의 타자로서 관리할 대상으로만 여기던 기존의 접근은 이제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다. 현대 복지국가는 그들을 타자로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구성원으로서 인식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전에 이루어지던 동화정책은 문화적 다양성과 인종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질적으로 간주되는 모든 요소들을 배제, 억압하며 주류사회의 편입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오히려 이주민을 주류사회에서 분리시키고 사회의 분열을 고착화하였다(김태희, 2016). 전통적으로 이주민의 동화정책을 추진해 온 프랑스의 2005년 무슬림 소요사태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이규영・김경미, 2009). 동화정책은 사회적 분리와 배제를 가져와 사회적 이질감을 증대시킨다는 한계가 있기에(문지영, 2009) 문화적・인종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주민에게도 평등한 권리 보장 및 공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김태희,

2016).

현재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이주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의 전개라는 사회 변화 안에서 과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적합한 방향으로 국민의 인식, 즉 다문화수용성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 구성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국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이 이주민의 적응과 동화만을 강조하고, 내국인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에는 소홀하여 사회통합이 어렵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김정선, 2011; 윤인진, 2016). 사회 구성의 변화에 적합한 방향으로 시민성이 재구성되고 그 일환으로 다문화수용성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확인하며 외국인주민들을 수동적인 복지 수혜자의 역할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쉽게 정보 공유가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정부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정착 지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친(親)복지태도 확대를 위한 정부신뢰의 중요성

본 연구는 정부신뢰를 복지태도 영향요인으로 다룸으로써 복지태도가 기존에 주로 다루어지던 계급변수나 자기이해 요인 변수와 같이 제한적인 영향요인 분석에서 더 나아가 좀 더 확장된 논의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정부신뢰의 제고가 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해 규범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신뢰가 낮은 저신뢰 국가라는 점에서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정부신뢰도 순위는 37개 국가 중 21위로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은 45%밖에 되지 않는다(OECD, 2021).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결과를 살펴볼 때, 의료기관, 교육기관이 정부기관에 비해 신뢰도가 높고 정부신뢰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27점으로 다소 낮아 아직까지 한국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과정은 정부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의 정책과정에서의 공정성은 시민들의 각종 요구사항을 정책준비부터 결정과정까지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김관보 외, 2010).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은 정부의 능력이나 전문성, 혹은 정책의 직접적인 성과보다는 정책과정상의 투명하고 공정한 정도가 시민들의 정부신뢰를 좌우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황창호 외, 2015; 최예나, 2018). 특히, 시민들은 본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정책이더라도 정책의 과정이 정당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면, 사회적 혜택과는 별개로 정부를 신뢰하게 된다(박종민・배정현, 2011). 이러한 의미에서 복지수혜자와 복지납세자라는 지위에 따라 나뉘어질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가 보장되려면 정부신뢰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과정상의 공정성이란 시민들에게 정책과정에서 나온 최종 결과물이 공정한지, 특정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공정한지, 그리고 시민이 서비스 및 정책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공정성 등을 모두 포괄한다(신상준・이숙종, 2016). 복지정책에 한해서 다시 이 공정성을 정의해보면, 복지 서비스나 정책 결과물이 개인의 기여하는 바에 비례하여 혹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말하며,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로 포함됐는지,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집행하는 과정의 처리속도 등이 속한다(Tax et al., 1998). 또한, 정책 및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동안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시민들이 공정한 대접을 받았는가에 대한 정도의 평가로 이해할 수 있다(Bies & Moag, 1986).

특히,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의견의 대립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정책과정상의 규범윤리를 지켜 공정성 있는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정부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이러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방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집행과정에서의 과정과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예산과 공공정책 및 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집행과정에서 국민들이 쉽게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낮출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은 복지수혜자와 복지납세자의 지위가 연관되어 있는데, 납세자들은 사회보장부서의 행정비용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Rainey, 1997) 실제 복지정책에 대한 지출, 이용료, 이용인원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 납세자가 가지는 행정비용에 대한 과대평가나 비용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가져오는 정책과정과 결과에서의 투명성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의하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항목에서 조사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방안으로는, 행정절차 투명성 강화, 국민 참여 확대, 공공정보 공개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는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정보접근권을 낮추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서는 3회 이상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해당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싶은 정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까지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열린 소통 채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임재훈・윤영채, 2021). 특히 정부는 정보를 분배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Holzner & Holzner, 2002). 주의해야 할 점은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전달되는 정보는 신뢰성과 진실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현황 중심의 행정통계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정책이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되는지를 증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복지정책으로부터 직접적 수혜를 받지 못하더라도,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알고 정책의 목표와 목적을 이해하면, 재분배정책 및 복지비용부담에 대한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시민들에게 정책집행의 절차 및 결과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정부신뢰의 회복과 동시에 우호적인 복지태도 형성을 돕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둘째, 정책준비부터 집행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복지국가는 후기산업사회를 진입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도 다양한 분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이 필요한 분야는 새롭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 혹은 잠재적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때, 정부가 시민들에게 정치참여를 위한 평등한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함으로써 더 나은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민들이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숙의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통기반의 신뢰형성을 마련해야 한다.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의하면, 공공서비스 이용 항목에서 공청회/청문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청회/청문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 즉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국민에게 참여의 기회비용은 크고,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은 그에 비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 개진에 대한 참여비용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시민들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교통비, 식비 혹은 물리적 공간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으로 그 방법을 물색해볼 수 있다(윤건・정소윤, 2018). 또한, 정부는 복지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복지정책에 대한 목표와 그 가치를 공유하고 진실하게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때 목표와 가치를 공유할 때 전문가의 적절한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전문가는 국민이 정부와의 소통 및 논의과정을 지원하는 입장으로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부와 소통하거나 참여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전문가가 해소해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과 정부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소통채널을 통해 참여를 실행한 개인은 본인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효능감을 가져와 개개인의 정부신뢰를 높이는 기회가 되며, 이는 개인의 복지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만을 활용함에 따른 한계를 가진다. 사회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문화, 세대, 사회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변수들로 구성한 연구이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연관성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횡단면 자료는 특정 시점에서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횡단연구에서 관찰된 관계를 통해서는 인과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다(Pedhazur, 1997). 두 변인의 시간적 순서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지 못한다는 횡단연구의 한계로 인해 엄밀하게는 독립-종속 변인과의 인과관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해석 또한 다양할 수 있다(Scandura & Williams, 2000).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 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다 상세한 다(多)시점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다문화수용성 변화에 따른 복지태도 변화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고, 그 인과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다문화수용성 변수는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수용정도로 단일문항을 사용하였으나, 외국인의 범주는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조선족, 유학생, 난민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으로 묶어서 분석에 활용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외국인'을 하위차원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외국인을 세부화함으로써 각각의 하위범주의 외국인에 대한 수용정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쓰인 다문화수용성 변수는 '수용정도'를 '받아들이

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접근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 변수의 ‘수용정도’를 외국인, 이주민이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 ‘나의 직장상사가 되는 것’, ‘나의 친구가 되는 것’, ‘자녀와 같은 반 학생이 되는 것’, ‘자녀의 친구가 되는 것’ 등으로 그 수용정도를 하위차원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에서는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척도로 다양성(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관계성(일방적 동화기대, 거부 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 보편성(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다문화수용성 구성요소별 수용성 수준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 관련 정책의 의제를 구체화하고 심층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주목한 정부신뢰는 정책에 대한 ‘기능적 신뢰’만을 포함하고 있어 개념적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신뢰를 주로 기능적 신뢰와 윤리적 신뢰에 대한 합인 다차원적인 지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 사용의 한계로 ‘사회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인 기능적 신뢰를 정부신뢰와 동등한 개념으로 규정하여 개념의 타당성이 다소 저해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활용한 설문 문항에서 정부에 대한 주체가 정의되지 않아 조사응답자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더하여, 정부신뢰는 상황에 따라 변화가 심한 개념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의 주효과 및 조절효과 결과가 2020년과 2021년이 달라 비일관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임을 유념하여 정부신뢰의 개념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의 복지태도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복지제도의 일반화된 목적들에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분배지향태도 및 정부의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로 인해 복지

국가 전반에 대한 태도를 포착할 수 있었으나, 개별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다문화수용성, 정부신뢰와 각 정책지지 간의 영향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각각의 정책분야에서 개인마다 위험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복지지지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책유형별로 다문화수용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그 영향경로에 미치는 정부신뢰의 조절관계를 동시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강서윤, 전희정. (2022). 사회적 자본이 안전인식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56(2), 395-427.

강운선. (2014). 고등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 유형이 다문화 수용성태도 유형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대구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교육」, 53(3), 31-49.

강혜진. (2018).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주민들의 지역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52(2), 67-99.

곽윤경. (2020).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다문화사회연구」, 13(2), 5-26.

권승. (2012). 보육서비스에 대한 복지태도 형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 28(4), 205-230.

권인욱. (2022). 한국 체류 이주노동자의 복지태도: 네팔 국적 E-9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다문화콘텐츠연구」, 39, 35-75.

권정만, 김학만. (2015).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복지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GRI 연구논총」, 17(3), 245-272.

권혁빈. (2013).『행정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보고서.

금종예, 금현섭. (2017). 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세금부담 인식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51(1), 1-29.

금현섭, 백승주. (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행정논총」, 48(4), 201-228.

김경미. (2009).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론적 좌표설정 모색.「정치정보연구」, 12(1), 45-60.

김관보, 손호중, 채경진, 송상훈. (2010). 지방정부신뢰도 측정 및 강화방안: 경기도정을 중심으로.「위탁연구」, 1-150.

김미혜, 정진경. (2002). 한국인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한

국사회복지학」, 50, 33-59.
김병섭, 강혜진. (2015). 신뢰가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1), 115-137.
김사현. (2012).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 PSM을활용한 이중차이분석.「한국사회정책」, 19(1), 9-38.
김사현. (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 4(1), 27-57.
김사현, 홍경준. (2010).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태도 연구.「사회복지정책」, 37(2), 95-121.
김상균. (1994). 한국인의 복지의식.「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1), 121-167.
김수완, 김상진, 강순화. (2014).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사회보장연구」, 30(2), 67-90.
김신영. (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 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조사연구」, 11(1), 87-105.
김영란. (199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계급 및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영순, 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경제와사회」, 91, 211-240.
김영혜, 정수빈. (2022). 코로나19와 경기도민 다문화수용성.「이슈분석」, 236.
김윤태, 유승호, 이훈희. (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한국학연구」, 0(45), 183-212.
김이선, 최윤정, 윤지소, 이재경, 문희영, 이명진, 양계민. (2019). 『2018년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김정선. (2011).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

한 비판적 고찰.「경제와사회」, 0(92), 205-246.
김지영, 김경아. (2018). 시민들의 정부정책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한국자치행정학보」, 32(4), 405-426.
김태희. (2016). 다문화사회와 동화주의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과 호주의 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한국행정사학지」, 38, 1-26.
김형관, 이상록. (2019). 복지태도 결정에 거시경제상황이 미치는 영향: 개인 특성 및 복지체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사회복지연구」, 50(3), 261-297.
김홍주. (2016).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김희상, 윤인진 (2017). 미디어 접촉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수용성의 변화.「사회과학연구」, 25(1), 8-42.
김희자. (1999).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분화.「사회복지정책」, 8, 106.
김희자, (2013). 계급·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변인의 조절효과 연구.「한국사회정책」, 20(2), 35-68.
남윤민. (2018). 한국의 복지확대와 증세에 대한 태도와 상반된 태도 결정요인.「담론201」, 21(2), 7-37.
노대명, 전지현. (2011).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법래. (2014). 한국 사회의 시기 및 계층간 복지국가지지 변동에 관한 종단연구.「행정논총」, 52(4), 139-164.
노성훈. (2013). 외국인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집단위협이론을 중심으로.「형사정책연구」, 151-184.
류만희, 최영. (2009). 복지정책의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191-210.
류진석. (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韓國社會福祉學」, 56(4), 79-101.
류현숙, 이재호, 최호진, 홍재환. (2011). 『(Web 2.0 시대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추진전략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모지환, 김행열. 2009.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조선대 동북아연구소」, 24(1), 179-199.
문승민, 최선미. (2019).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에 따른 세금부담 의향의 영향요인 분석: 정부역량인식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정부학연구」, 25(3), 289-316.
문지영. (2009).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다문화사회연구」, 2(1), 33-66.
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선보영, 이명진. (2012).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박근수, 곽연희. (2013).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조사를 통해본 청소년 다문화 교육 필요성 연구. 사회과학연구, 22(0), 112-137.
박종민. (1991). 정책산출이 정부신뢰에 주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25(1), 291-305.
박종민. (2008).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한국정치학회보」, 42(4), 269-288.
박종민, 배정현. (2011).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정부학연구」, 17(2), 117-142.
박종민, 조인영. (2007). 신자유주의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한국행정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上)」, 477-494.
박천오, 박경효. (2001). 『한국 관료제의 이해』. 서울 : 법문사
박통희. (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한국행정학보」, 33(2), 1-17.
박현신. (2021). 정부신뢰와 이념 그리고 정책태도 간 관계: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를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 60(2), 549-574.
박희봉, 이희창, 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한국행정학보」, 37(3), 45-67.
배귀희, 임승후. (2009). 정부신뢰가 공식적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행정논집」, 21(4), 1421-1447.
백정미, 주은선, 김은지. (2008).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연구」, 37, 319-344.
법무부. (2019). 『2019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서문기. (2001). 한국사회의 정부신뢰구조. 「한국사회학」, 35(3), 119-147.
손동영. (2015). 신뢰수준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신뢰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추가적 납세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손호중, 채원호. (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9(3), 87-113.
신동훈, 양경은. (2020). 일상 속 이주민 목격과 대중매체의 이주민 재현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46(1), 111-139.
신상준, 이숙종. (2016).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부성과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다중집단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0(2), 1-37.
신상준, 이숙종, 김보미. (2018). 경제적·정치적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 「아세아연구」, 61(3), 109-142.
안상수, 김이선, 마경희, 문희영, 이명진. (2015).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훈. (2000). 복지정치의 사회적 균열구조에 관한 연구 -계급론의 한계와 새로운 분석틀. 「韓國社會福祉學」, 43(43), 193-221.
안상훈. (2009).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16(1), 163-192.
안상훈, 김영미, 김수완. (2021). 한국인의 복지태도: 균열구조의 형성과 변화. 「보건사회연구」, 41(1), 42-60.
안상훈, 조영민. (2022). 사회계층이 사회적경제 지지에 미치는 영향 : 복지태도와 정치성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2(1), 31-57.
안치민. (1995).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계급, 「고려사회학논집」, 9, 211-227.

양옥경. (2002).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 연구: 서울 지역 기혼자를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51, 229-256.
양은경. (2010). 민족의 역이주와 위계적 민족성의 담론 구성:『조선일보』의 조선족 담론 분석.「한국방송학보」, 24(5), 194-237.
양재진, 민효상. (2013). 한국 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체제의 기원과 복지증세에 관한 연구.「동향과 전망」, 48-96.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오경민, 박홍식. (2002).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한국정책학회보」, 11(3), 113-137.
오창룡. (2017). 유럽 테러리즘의 정당화 기제와 이주민 갈등.「안과밖: 영미문학연구」, 0(43), 157-176.
우명숙, 남은영. (2014). 공적 제도 인식이 친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사회보장연구」, 30(1), 167-195.
윤건, 정소윤. (2018). 정부역량 지수화 방안 연구(Ⅲ): 국민과 정부의 참여역량을 중심으로.「기본연구과제」, 2018(0), 3151-3447.
윤도현. (2013). 한국 복지국가의 계층적 성격: 공적 이전지출과 조세를 중심으로.「경제와 사회」, 98(2), 205-232.
윤인진. (2016).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의 지형과 변화.「디아스포라연구」, 10(1), 125-154.
윤인진, 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통일문제연구」, 23(1), 143-192.
윤홍식. (2012).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쟁의 한계, 성과, 전망: 무상급식에서 4.11총선까지.「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79-207.
이광훈, 김권식. (2012). 복지인식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사회과학논집」, 43(1), 95-113.
이규영, 김경미. (2009).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정치 참여. 유럽연구, 27(2), 1-24.
이미숙. (2020).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인식이 복지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

향.「한국행정논집」, 32(4), 741-758.
이상록, 김형관. (2014).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결정요인.「한국사회복지학」, 66(1), 163-189.
이성균. (2002).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한국사회학」, 36(2), 205-228.
이수인. (2013). 정부신뢰에 대한 정치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효과 비교와 관계성의탐색: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정부학연구」, 19(2), 195-239.
이승종. (2010). 정부신뢰에 대한 종교의 영향.「한국행정학보」, 44(1), 99-119.
이승주, 박소영. (2019).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연구」, 23(2), 153-173.
이아름. (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인재. (1998). IMF관리체제이후 한국인의 사회복지 의식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연구」, 12, 85-110.
이인희, 황경아. (2013). 다문화 관련 미디어 보도 프레임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다문화사회연구」, 6(2), 83-108.
이재철. (2017).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및 인식 분석.「정치정보연구」, 20(2), 275-304.
이종두, 백미연. (2012). 한국의 특수성과 다문화 정책.「국제관계연구」, 17(1), 335-361.
이중섭. (200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정책」, 36(4), 73-99.
이진향. (2021). 빈곤원인 인식, 정부신뢰, 복지의식의 관계 연구.「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7), 271-280.
이한나, 이미라. (2010).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형평성 지각의 효과를 중심으로.「보건사회연구」, 30(2), 254-286.
이헌수. (1999). 국민의 행정신뢰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33(2), 37-56.
이현우. (2013). 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정부의 질, 한국과 북유럽 국가 비교.「한국정치연구」, 22(3), 95-119.
이형하. (2014).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관계.「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19(11), 193-202.
이훈희, 김윤태, 이원지. (2011). 한국의 복지태도와 건강보험 인식의 결정요인.「사회보장연구」, 27(2), 1-25.
임고운빛. (2015). 복지태도와 상대적 복지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정부신뢰와 정부공정성인식의 조절효과에 관하여.「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3650.
임양준. (2012). 한국거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문의 보도 경향과 인식연구: 조선일보, 한겨레, 경인일보, 부산일보를 중심으로.「언론과학연구」, 12(4), 419-456.
임재영, 문국경. (2019).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과 정치신뢰의 함의.「행정논총」, 57(3), 33-62.
임재훈, 윤영채. (2021).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정부신뢰의 관계분석: 분위수 회귀분석을 중심으로.「행정논총」, 59(4), 187-214
장귀연. (2013).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계급구조.「마르크스주의연구」. 10(3), 12-40.
장수지. (2021). 다문화접촉경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연령집단별 분석.「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70, 5-27
장승진. (2017). 사회적 공정성 인식과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동서연구」, 29(2), 67-89.
장신재. (2020). 다문화 수용태도 결정요인: 2018년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중심으로.「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4, 75-92.
정광호, 이달곤, 하혜수. (2011). 지방정부신뢰요인의 탐색. 「한국행정학보」, 45(4), 181-201.
정연구, 송현주, 윤태일, 심훈. (2011). 뉴스 미디어의 결혼이주여성 보도가 수용자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다문화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2), 405-444.
전희정, 서동희. (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 복지선호와 증세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2(2), 33-62.
조돈문. (2001).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 효과. 「산업노동연구」, 7(1), 157-191.
조정하, 김성한. (2018).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신뢰, 수용, 소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5(1), 86-110.
조진만. (2014). 한국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 결정요인 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24(3), 113-134.
주은선, 백정미. (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34), 203-225.
채영길. (2010). 미디어의 이주민 타자화 프레임 분석.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4(2), 205-241.
최고은. (2016).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1), 125-150.
최미경, 공계순. (2022). 대학생의 사회자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20, 131-160.
최성락, 전별. (2019).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정부요소 및 개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2), 238-248.
최예나. (2018). 공공가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보비대칭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2), 1-21.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2021 언론수용자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행정연구원. (2021).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지침서』. 한국행정연구원.
허수연, 김한성. (2016).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2(3), 203-235.
허윤철, 임영호, 조윤용. (2017). 지역과 국가수준의 사회자본이 다문화수

용성에 미치는 영향.「디아스포라연구」, 11(2), 51-88.
황아란, 이지호. (2015). 복지부문 정부역할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한국과 국제정치」, 31(2), 177-201.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아세아연구」, 53(4), 152-184.
황창호, 김영주, 문명재. (2015). 행정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한국행정학보」, 49(4), 123-150.
Abrams, J. R., McGaughey, K. J., & Haghighat, H. (2018). Attitudes toward muslims: A test of the 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and contact theory.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search, 47(4), 276-292.
Ahn, S. H., & Kim, S. W. (2014). Dynamic cleavages of 'welfare rights and duties' in public attitude towards old-age pensions: A comparative study. European Societies, 16(1), 90-111.
Alesina, A., Murard, E., & Rapoport, H. (2021). Immigration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Europe,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21(6), 925 - 954,
Andreß, H., & Heien, T. (2001).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4), 337-356.
Barber, B.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Vol. 96).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1182.
Bies, R. J., & Moag, J. S. (1986). Interactional justice: Commnuications criteria of justice. Research on Negotiation

Organizations, 1, 43-55.

Blalock, H. (1967). Toward a Theory of Minority-group Relations. New York: Wiley.

Blekesaune, M., & Quadagno, J. (2003).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poli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5), 415 - 427.

Blind, P. K. (2007). Building trust in government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view of literature and emerging issues. In 7th Global Forum on Reinventing Government Building Trust in Government, 26-29.

Bonoli, G., & Häusermann, S. (2009). WHO WANTS WHAT FROM THE WELFARE STATE?. European Societies, 11(2), 211-232.

Boomgaarden, H., & Vliegenthart, R. (2009). How news content influences anti-immigration attitudes: Germany, 1993 - 2005.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8, 516 - 542.

Braithwaite, V., & Levi, M. (1998). Trust and governance. New York: RussellSage.

Brooks, C., & Manza, J. (2006). Why do welfare states persist?. Journal of Politics, 68(4), 816-827.

Burgoon, B., & Rooduijn, M. (2021). 'Immigrationization' of welfare politics? Anti-immigration and welfare attitudes in context. West European Politics, 44(2), 177-203.

Chanley, V. A. (2000).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64(3), 239-256.

Chanley, V. A. (2002). Trust in government in the aftermath of 9/11: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Political Psychology, 23(3), 469-483.

Christensen, T., & Laegreid, P. (2002). New public management: puzzles of democracy and the influence of citizens.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0(3), 267-295.

Citrin, J., & Green, D. (1986).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resurgence of trust in governm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4), 431-453.

Corneo, G., & Gruner, H. P. (2002). Individual preferences for political redistribu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3(1), 83-107.

Craig, S. C., Gainous, J., Room, F. H., & Martinez, M. D. (2006). Political trust and support for social welfare: The role of ambivalence. I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hiladelphia, PA.

Crepaz, M. M. L., & Damron, R. (2009). Constructing tolerance: how the welfare state shapes attitudes about immigran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2(3), 437 - 463.

Derks, A. (2004). Are the underprivileged really that economically leftist? Attitudes towards economic redistribution and the welfare state in Flander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3, 509-521

Dirks, K. T., & Ferrin, D. L. (2001). The role of trust in organizational settings. Organization Science, 12(4), 450 - 467.

Edlund, J. (1999). Trust in government and welfare regimes: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nd financial cheating in the USA and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5(3), 341-370.

Edmonds, C., & Killen, M. (2009). Do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al racial attitudes relate to their intergroup contact and cross-race relationship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2(1), 5-21.

Emmenegger, P., & Klemmensen, R. (2013). Immigration and redistribution revisited: how different motivations can offset

each other.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4), 406 - 422.
Esping-Andersen, G. (1985). Politics Against Market, Princeton University Press.
Finseraas, H. (2008). Immigration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European survey data. Comp Eur Polit, 6, 407 - 431.
Flynn, J., Kasperson, R., Kunreuther, H., & Slovic, P. (1992). Time to rethink nuclear waste storage. Science and Technology, 8(4), 42-48.
Fong, C. (2001). Social preferences, self-interest, an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2(2), 225-246.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115-134.
Fukuyama, F. (1995). Trust :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Gamson, W. A. (1968). Power and Discontent. Belmont, CA: Dorsey.
Garand, J., Xu, P., & Davis, B. (2017). Immigration Attitudes and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in the American Mass Public.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1(1), 146-162.
Gërxhani, K., & Koster, F. (2012). 'I am not alone': Understanding public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International Sociology, 27(6), 768-787.
Gingrich, J., & Ansell, B. (2012). Preferences in contex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5(12), 1624-1654.
Goodhart, D. (2004, February 20). Too diverse?, Prospect, https://www.prospectmagazine.co.uk/magazine/too-diverse-david-goodhart-multiculturalism-britain-immigration-globalisation.
Goodman, S., & Alarian, H. (2021). National Belonging and Public

Support for Multiculturalism. Journal of Race, Ethnicity, and Politics, 6(2), 305-333.

Goodwin, M., & Milazzo, C. (2017). Taking back control? Investigating the role of immigration in the 2016 vote for Brexit.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9(3), 450-464.

Haas H., de Miller M. J., & Castles S. (2020). The age of migration :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6th). Red Globe Press.

Hansenfeld, Y., & Rafferty, J. A. (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 1027-1048.

Haselswerdt, J. (2021). Social welfare attitudes and immigrants as a target population: experimental evidence. Perspectives on Politics, 19(2), 442-459.

Hetherington, M.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Hetherington, M. J. (2005). Why Trust Matters: Declining Political Trust And The Demise Of American Liber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Hetherington, M. J., & Globetti, S. (2002). Political trust and racial policy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2), 253-275.

Hetherington, M., & Rudolph, T. J. (2011). Trust, sacrifice, and public support for health care reform.. APSA 2011 Annual Meeting paper, 1-31.

Holzner, B., & Holzner, L. (2002). The transparency syndrome in global change: A sociological concept paper. Ekistics, 69(412/413/414), 152-162.

Hoyle, R. H.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Sage Publications.

Huckfeldt, R., Levine, J., Morgan, W., & Sprague, J. (1999). Accessibility and the political utility of partisan and ideological orient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3(3), 888 - 911.

Huseby, B. M. (1995). Attitudes towards the size of government. The Scope of Government, 87-118.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 [IOM]. (2018). Global migration indicators 2018.

Iversen, T., & Soskice, D. (2001). An asset theory of social policy preferen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875-893.

Jimenez, P., & Iyer. G. S. (2016). Tax compliance in a social setting:the influence of social norms, trust in government, and perceived fairness on taxpayer compliance. Advances in accounting, 34, 17-26.

Keele, L. (2007). Social capital and the dynamics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2), 241-254.

Kirchner, A., Freitag, M., & Rapp, C. (2011). Crafting Tolerance: The Role of Political Institution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2), 201 - 227.

Konisky, D. M., Milyo, J., & Richardson Jr, L. E. (2008). Environmental policy attitudes: Issues, geographical scale, and political trust. Social Science Quarterly, 89(5), 1066-1085.

Korpi, W.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Korpi, W. (1989). Power, politics, and state autonomy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citizenship: Social rights during sickness

in eighteen OECD countries since 193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3), 309-328.

Korpi, W., & Palme, J. (2003). New politics and class politics in the context of austerity and globalization: Welfare state regress in 18 countries, 1975~95.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7(3), 425-446.

Kymlicka, W. (2013).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Larsen, C. A. (2008). The institutional logic of welfare attitudes: How welfare regimes influence public suppor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2), 145-168.

Levi, M. (1997). Consent, Dissent and Patriot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vi, M. (1998). A state of state. In Braithwaite, V. & Levi, M. (Eds.), Trust and Governance. New York: Russell Sage.

Lijphart, A. (1999).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New Haven, CT;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Linos, K., & West, M. (2003). Self interest, social beliefs,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re addressing the issue of cross national vari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4), 393-409.

Lupia, A., Levine, A. S., Menning, J. O., & Sin, G. (2007). Were Bush tax cut supporters "simply ignorant?" A second look at conservatives and liberals in "Homer gets a tax cut". Perspectives on Politics, 5(4), 773-784.

Marien, S., & Hooghe, M. (2011). Does political trust matter?: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 between political trust and support for law complianc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0(2), 267-291.

Marquart-Pyatt, S., & Paxton, P. (2007). In Principle and in Practice: Learning Political Tolerance in Eastern and Western Europe, Political Behavior, 29(1), 89 - 113.

Mau, S., & Burkhardt, C. (2009). Migration and Welfare State Solidarity in Western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9(3), 213 - 29.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Miller, A. H.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1964-197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51-972.

Mishler, W., & Richard R. (2001). What are the origins of political trust?: testing institutional and cultural theories in post communist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1), 30-62.

Nye, J. S., Júnior, J. S. N., Zelikow, P., & King, D. C. (1997).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OECD. (2021).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

Page, B., & Shapiro, R. (1983). Effects of public opinion on poli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1), 175-190.

Papadakis, E., & Bean, C. (1993). Popular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a comparison between institutional regimes.. Journal of Public Policy, 13(3), 227-254.

Pedhazur, E. J. (1997). Multiple Regression in Behavioral Research: Explanation and Prediction(3rd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Pettersen, P. (2001). Welfare state legitimacy: Ranking, rating, paying:

the popularity and support for Norwegian welfare programmes in the mid 1990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4(1), 27-49.

Pierson, P. (1996).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World Politics, 48(2), 143-179.

Pierson, P. (2001).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onza, M., Duncan, G. J., Corcoran, M., & Groskind, F. (1988). The guns of autumn? Age differences in support for income transfers to the young and old. Public Opinion Quarterly, 52(4), 441-466.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New York. NY.

Rainer, H., & Siedler, T. (2008). Subjective income and employment expectations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Economics Letters, 99(3), 449-453.

Rainey, H. G. (1997).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John Wiley & Sons.

Rehm, P. (2009). Risks and redistribution: An individual-level analy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2(7), 855-811.

Roemer, J. E., & Van der Straeten, K. (2005). Xenophobia and the size of the public sector in France: A politico-economic analysis. Journal of Economics, 86(2), 95 - 144.

Roemer, J. E., & Van der Straeten, K. (2006). The political economy of xenophobia and distribution: the case of Denmark.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08(2), 251 - 277.

Roth, C., & Wohlfart, J. (2018). Experienced inequality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67, 251-262.

Rothstein, B., & Stolle, D. (2008). The state and social capital: An

institutional theory of generalized trust.. Comparative Politics, 40(4), 441 - 467.

Rudolph, T. (2009).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tax cuts. Public Opinion Quarterly, 73(1), 660-671.

Rudolph, T., & Evans, J. (2005).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3), 660-671.

Sainsbury, D. (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andura, T. A., & Williams, E. A. (2000). Research methodology in management: Current practices, trend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 1248-1264.

Scholz, J. T., & Lubell, M. (1998). Trust and tax paying: Testing the heuristic approach to collective ac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2), 398-417.

Scholz, J. T., & Pinney, N. (1995). Duty, fear, and tax compliance: The heuristic basis of citizenship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2), 490-512.

Sears, D., & Citrin, J. (1982). Tax Revolt : Something for Nothing in Californi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Senik, C., Stichnoth, H., & Van Der Straeten, K. (2009). Immigration and natives' attitudes towards redistribution: Evidence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Social Indicators Research, 91(3), 345-370.

Skogan, W. G., & Maxfield, M. G. (1981). Coping With Crime: Individual And Neighborhood Reactions (Vol. 124).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Soroka, S., Banting, K., & Johnston, R. (2006). Immigration and

redistribution in a global era. Globalization and Egalitarian Redistribution, 261-288.

Stephens, J., (1979), The Transition from Capitalism to Socialism. McMillan.

Svallfors, S. (1991). The politics of welfare policy in Sweden:Structural determinants and attitudinal cleavag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2(4), 609-634.

Svallfors, S. (1995). The end of class politics? Structural cleavages and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ies. Act a Sociologica, 38(1), 53-74.

Svallfors, S. (2002). Political trust and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unpacking a supposed relationship. In Rothstein, B., Steinmo, S. (eds), Restructuring the welfare state: Political 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 (pp. 184-205). Palgrave Macmillan, New York.

Svallfors, S. (2004). Class, attitudes and the welfare state: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8(2), 119-138.

Svallfors, S. (2011). A Bedrock of Support? Trends in Welfare State Attitudes in Sweden, 1981-2010.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5(7), 806-825.

Tausch, A. (2016). Muslim immigration continues to divide Europe: A quantitative analysis of European social survey data. Middle East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20(2), 37-50.

Tax, S. S., Brown, S. W., & Chandrashekaran, M. (1998). Customer evaluation of service complaint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62, 60-76.

Taylor, R. B., & Hale, M. (1986).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fear of crime. J. Crim. L. & Criminology, 77, 151-189.

Taylor-Gooby, P. (1985). Attitudes to welfare. Journal of Social Policy, 14(1), 73-81.

Taylor-Gooby, P. (2001). Sustaining state welfare in hard times: who will foot the bill?.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1(2), 133-147.

Tomlinson, M., & Walker, R. (2012). Labor market disadvantage and the experience of recurrent poverty.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52-72.

Uslaner, E. M. (2012). Segregation and Mistrust: Diversity, Isolation, and Social Cohes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n der Waal, J., De Koster, W., & Van Oorschot, W. (2013). Three worlds of welfare chauvinism? How welfare regimes affect support for distributing welfare to immigrants in Europe.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15(2), 164 - 181.

van Oorschot, W. (2002). Individual motives for contributing to welfare benefits in the Netherlands. Policy & Politics, 30(1), 31-46.

van Oorschot, W., & Uunk, W. (2007). Welfare spending and the public's concern for immigrants: Multilevel evidence for eighteen European countries. Comparative Politics, 40(1), 63 - 82.

Verkuyten, M., & Thijs, J. (2002). Racist victimization among children in The Netherlands: The effect of ethnic group and school. Ethnic and Racial Studies, 25(2), 310-331.

Wright, E. (1985). Class. Verso.

Yang, K., & Holzer, M. (2006). The performance-trust link implication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1), 114-126.

Zirkel, S. (2008). Creating more effective multiethnic schools.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2(1), 187-241.

Zucker, L. G. (1986). Production of trust : Institutional source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In Staw. B. M. & Cummings, L. L.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pp. 53-111). Greenwich, CN : JAI Press.

[부록 1]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연구결과

<부록: 표 1-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8,336)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계급 요인	계급	전문직	373	4.5
		사무판매직	3,740	44.9
		농림어업직	353	4.2
		기능조립직	807	9.7
		단순노무직	418	5.0
		비경제활동인구	2,645	31.7
	계층	상용근로자	3,028	36.3
		임시일용근로자	844	10.1
		고용주/자영업자	1,581	19.0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	2,883	34.6
자기이해 요인	성별	남	4,133	49.6
		여	4,203	50.4
	연령	19~20대	1,382	16,6
		30대	1,288	15.5
		40대	1,563	18.8
		50대	1,654	19.8
		60대이상	2,449	29.4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57	18.7
		200~300만원	1,243	14.9
		300~400만원	1,579	18.9
		400~500만원	1,349	16.2
		500~600만원	1,217	14.6
		600만원 이상	1,391	16.7
	교육수준	초졸 이하	900	10.8
		중졸	627	7.5
		고졸	3,340	40.1
		대졸 이상	3,469	41.6
가치관 요인	정치성향	매우 보수	307	3.7
		다소 보수	1,859	22.3
		중도	3,995	47.9
		다소 진보	1,930	23.2
		매우 진보	245	2.9

<부록: 표 1-2> 정부신뢰에 따른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구분	집단특성		정부신뢰 낮은 집단 (n=5,316)	정부신뢰 높은 집단 (n=3,020)	전체 (n=8,336)
			N(%)		
계급 요인	계급	전문직	238(4.5)	135(4.5)	373(4.5)
		사무판매직	2,409(45.3)	1,331(44.1)	3,740(44.9)
		농림어업직	208(3.9)	145(4.8)	353(4.2)
		기능조립직	556(10.5)	251(8.3)	807(9.7)
		단순노무직	259(4.9)	159(5.3)	418(5.0)
		비경제활동인구	1,646(31.0)	999(33.1)	2,645(31.7)
	계층	상용근로자	1,873(35.2)	1,155(38.2)	3,028(36.3)
		임시일용근로자	519(9.8)	325(10.8)	844(10.1)
		고용주/자영업자	1,028(19.3)	553(18.3)	1,581(19.0)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	1,896(35.7)	987(32.7)	2,883(34.6)
자기 이해 요인	성별	남성	2,719(51.1)	1,414(46.8)	4,133(49.6)
		여성	2,597(48.9)	1,606(53.2)	4,203(50.4)
	연령	19~20대	906(17.0)	476(15.8)	1,382(16.6)
		30대	843(15.9)	445(14.7)	1,288(15.5)
		40대	992(18.7)	571(18.9)	1,563(18.8)
		50대	1,083(20.4)	571(18.9)	1,654(19.8)
		60대 이상	1,492(28.1)	957(31.7)	2,449(29.4)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932(17.5)	625(20.7)	1,557(18.7)
		200~300만원	806(15.2)	437(14.5)	1,243(14.9)
		300~400만원	1,093(20.6)	486(16.1)	1,579(18.9)
		400~500만원	885(16.6)	464(15.4)	1,349(16.2)
		500~600만원	727(13.7)	490(16.2)	1,217(14.6)
		600만원이상	873(16.4)	518(17.2)	1,391(16.7)
	교육수준	초졸 이하	486(9.1)	414(13.7)	900(10.8)
		중졸	391(7.4)	236(7.8)	627(7.5)
		고졸	2,222(41.8)	1,118(37.0)	3,340(40.1)
		대졸 이상	2,217(41.7)	1,252(41.5)	3,469(41.6)
가치관 요인	정치성향	매우 보수	173(3.3)	134(4.4)	307(3.7)
		다소 보수	1,187(22.3)	672(22.3)	1,859(22.3)
		중도	2,613(49.2)	1,382(45.8)	3,995(47.9)
		다소 진보	11,198(22.5)	732(24.2)	1,930(23.2)
		매우 진보	145(2.7)	100(3.3)	245(2.9)

<부록: 표 1-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및 정규분포성 검토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다문화수용성	5.18	1.838	-.513	.669
정부신뢰	2.27	.56	-.060	-.126
분배지향태도	4.84	1.554	-.315	1.250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5.16	1.927	-.462	.362

<부록: 표 1-4>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다문화수용성	정부신뢰	분배지향태도	비용부담의지
다문화수용성	1			
정부신뢰	.082***	1		
분배지향태도	.116***	.059***	1	
비용부담의지	.449***	.107***	.127***	1

*p < .05, **p < .01, ***p< .001

<부록; 표 1-5> 연구대상자 특성별 정부신뢰 차이

구분	집단특성		빈도 (명)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 검정
계급 요인	계급	전문직[a]	373	1.36(.48)	F=3.353**	a<b
		사무판매직[a]	3,740	1.36(.48)		
		농림어업직[b]	353	1.41(.49)		
		기능조립직[a]	807	1.31(.46)		
		단순노무직[a]	418	1.38(.48)		
		비경제활동인구[a]	2,645	1.38(.48)		
	계층	상용근로자	3,028	1.38(.49)	F=4.249	-
		임시일용근로자	844	1.39(.49)		
		고용주/자영업자	1,581	1.35(.48)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	2,883	1.34(.47)		
자기 이해 요인	성별	남성	4,133	1.34.49)	t=3.80*	-
		여성	4,203	4.85(1.51)		
	연령	19~20대	1,382	1.34(.48)	F=3.561	-
		30대	1,288	1.35(.48)		
		40대	1,563	1.37(.48)		
		50대	1,654	1.35(.47)		
		60대이상	2,449	1.39(.48)		
	소득수준	200만원이하[b]	1,557	1.40(.49)	F=8.514***	a<b
		200~300만원[a]	1,243	1.35(.48)		
		300~400만원[a]	1,579	1.30(.46)		
		400~500만원[a]	1,349	1.34(.48)		
		500~600만원[b]	1,217	1.40(.49)		
		600만원이상[b]	1,391	1.37(.48)		
	교육수준	초졸 이하[a]	900	1.46(.50)	F=16.334***	a<b
		중졸[b]	627	1.38(.49)		
		고졸[b]	3,340	1.33(.47)		
		대졸 이상[b]	3,469	1.36(.48)		
가치관 요인	정치성향	매우 보수[b]	307	1.44(.50)	F=4.153**	a<b
		다소 보수[a]	1,859	1.36(.48)		
		중도[a]	3,995	1.35(.48)		
		다소 진보[a]	1,930	1.38(.49)		
		매우 진보[a]	245	1.41(.49)		

*p < .05, **p < .01, ***p< .001

<부록: 표 1-6> 연구대상자 특성별 분배지향태도 차이

구분	집단특성		빈도 (명)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 검정
계급 요인	계급	전문직	373	4.83(1.63)	F=1.532	-
		사무판매직	3,740	4.84(1.53)		
		농림어업직	353	4.73(1.69)		
		기능조립직	807	4.90(1.61)		
		단순노무직	418	5.01(1.56)		
		비경제활동인구	2,645	4.83(1.54)		
	계층	상용근로자	3,028	4.85(1.57)	F=2.441	-
		임시일용근로자	844	4.89(1.58)		
		고용주/자영업자	1,581	4.60(1.51)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	2,883	4.83(1.55)		
자기 이해 요인	성별	남성	4,133	4.84(1.60)	t=.203	-
		여성	4,203	4.85(1.51)		
	연령	19~20대[a]	1,382	4.73(1.55)	F=5.361***	a<b
		30대[a]	1,288	4.86(1.58)		
		40대[b]	1,563	4.95(1.57)		
		50대[b]	1,654	4.91(1.54)		
		60대이상[a]	2,449	4.79(1.54)		
	소득수준	200만원이하	1,557	4.83(1.53)	F=1.417	-
		200~300만원	1,243	4.95(1.58)		
		300~400만원	1,579	4.82(1.58)		
		400~500만원	1,349	4.81(1.59)		
		500~600만원	1,217	4.81(1.56)		
		600만원이상	1,391	4.86(1.49)		
	교육수준	초졸 이하	900	4.86(1.55)	F=1.719	-
		중졸	627	4.88(1.51)		
		고졸	3,340	4.80(1.55)		
		대졸 이상	3,469	4.88(1.57)		
가치관 요인	정치성향	매우 보수[a]	307	4.31(2.00)	F=22.993***	a<b <c<d
		다소 보수[b]	1,859	4.68(1.57)		
		중도[b]	3,995	4.85(1.47)		
		다소 진보[c]	1,930	5.03(1.56)		
		매우 진보[d]	245	5.20(1.83)		

*p < .05, **p < .01, ***p< .001

<부록: 표 1-7> 연구대상자 특성별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구분	집단특성		빈도 (명)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정
계급 요인	계급	전문직[b]	373	5.56(2.10)	F=6.108***	a<b
		사무판매직[a]	3,740	5.21(1.84)		
		농림어업직[a]	353	4.98(2.06)		
		기능조립직[a]	807	5.18(1.87)		
		단순노무직[a]	418	4.95(2.16)		
		비경제활동인구[a]	2,645	5.08(1.97)		
	계층	상용근로자	3,028	5.20(1.93)	F=1.653	-
		임시일용근로자	844	5.03(1.96)		
		고용주/자영업자	1,581	5.15(1.89)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	2,883	5.17(1.93)		
자기 이해 요인	성별	남성	4,133	5.19(.03)	t=-1.304	-
		여성	4,203	5.13(.03)		
	연령	19~20대[a]	1,382	5.15(1.89)	F=6.904***	a<b
		30대[b]	1,288	5.27(1.85)		
		40대[b]	1,563	5.30(1.92)		
		50대[a]	1,654	5.19(1.95)		
		60대이상[a]	2,449	5.01(1.97)		
	소득수준	200만원이하[a]	1,557	4.86(1.94)	F=14.975***	a<b<c
		200~300만원[b]	1,243	5.21(2.00)		
		300~400만원[b]	1,579	5.19(1.91)		
		400~500만원[a]	1,349	5.07(1.94)		
		500~600만원[b]	1,217	5.24(1.83)		
		600만원이상[c]	1,391	5.44(1.89)		
	교육수준	초졸 이하[a]	900	4.84(2.00)	F=24.666***	a<b
		중졸[a]	627	4.84(1.93)		
		고졸[b]	3,340	5.12(1.93)		
		대졸 이상[b]	3,469	5.34(1.88)		
가치관 요인	정치성향	매우 보수[a]	307	5.04(2.22)	F=18.965***	a<b<c
		다소 보수[a]	1,859	4.91(1.99)		
		중도[a]	3,995	5.17(1.84)		
		다소 진보[b]	1,930	5.33(1.90)		
		매우 진보[b]	245	5.79(2.38)		

*p < .05, **p < .01, ***p< .001

<부록: 표 1-8> 모형1: 분배지향태도

변수명		모형 1-1			모형1-2			모형1-3			모형1-4		
		분배지향태도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계급 요인 (계급)	전문직	-.023	.090	.802	-.018	.090	.843	-.021	.089	.813	-.026	.089	.769
	사무판매직	-.023	.043	.596	-.017	.043	.700	-.015	.043	.735	-.011	.043	.804
	농림어업	-.109	.090	.223	-.115	.089	.198	-.120	.089	.177	-.132	.089	.137
	기능조립직	.047	.067	.483	.053	.066	.426	.062	.066	.354	.067	.066	.312
	단순노무직	.170*	.082	.038	.186*	.082	.023	.183*	.082	.025	.187*	.081	.022
계급 요인 (계층)	상용임금근로자	.001	.040	.971	.003	.040	.944	-.002	.040	.967	-.003	.040	.938
	임시일용임금근로자	.021	.060	.731	.025	.060	.678	.017	.060	.782	.021	.060	.721
	고용주/자영업자	.063	.048	.196	.063	.048	.188	.057	.048	.234	.059	.048	.222
자기 이해 요인	성별	-.017	.036	.642	-.026	.036	.464	-.021	.036	.554	-.023	.036	.522
	연령	.045**	.014	.002	.044**	.014	.002	.042**	.014	.003	.043**	.014	.003
	소득	-.009	.010	.375	-.013	.010	.174	-.015	.010	.118	-.015	.010	.109
	교육수준	.006	.025	.817	.004	.025	.874	.009	.025	.721	.008	.025	.746
가치관 요인	정치성향	.220***	.021	.000	.202***	.021	.000	.198***	.021	.000	.202***	.021	.000
다문화수용성					.091***	.009	.000	.088***	.009	.000	.091***	.009	.000
정부신뢰								.071***	.017	.000	.075***	.017	.000
다문화수용성*정부신뢰											.080***	.015	.000
상수		4.046			3.653			3.676			3.646		
R^2		.014			.026			.028			.031		
Adjusted R^2		.013			.024			.026			.029		
$\triangle R^2$											.003***		

F	9.232***	15.710***	15.873***	16.587***

*p < .05, **p < .01, ***p< .001

a. 준거집단은 비경제활동인구

b. 준거집단은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

<부록: 표 1-9> 모형2: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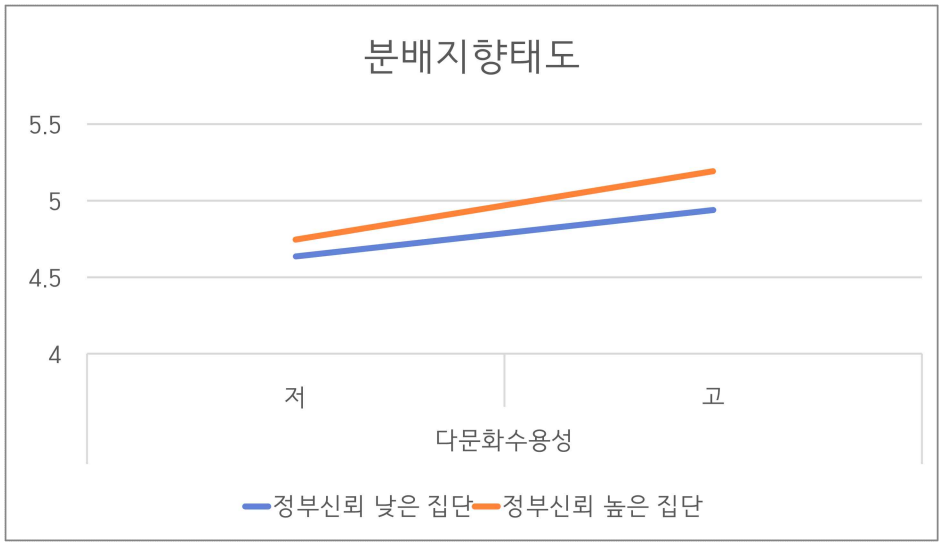
변수명		모형 1-1			모형1-2			모형1-3			모형1-4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계급 요인 (계급[a])	전문직	.192	.112	.085	.217	.100	.030	.210	.100	.035	.205	.100	.040
	사무판매직	-.063	.054	.244	-.030	.048	.528	-.026	.048	.584	-.022	.048	.641
	농림어업	.006	.111	.957	-.022	.100	.824	-.033	.099	.738	-.045	.099	.647
	기능조립직	-.057	.083	.488	-.027	.074	.715	-.010	.074	.893	-.004	.074	.953
	단순노무직	-.077	.102	.447	.002	.091	.980	-.004	.091	.966	.000	.091	.996
계급 요인 (계층[b])	상용임금근로자	.023	.050	.651	.029	.045	.511	.021	.045	.645	.019	.044	.668
	임시일용임금근로자	-.142	.075	.058	-.121	.067	.071	-.137	.067	.040	-.133	.067	.048
	고용주/자영업자	-.030	.060	.614	-.026	.054	.626	-.038	.054	.474	-.037	.053	.490
자기 이해 요인	성별	.014	.045	.755	-.034	.040	.392	-.024	.040	.543	-.026	.040	.514
	연령	.054**	.018	.003	.047**	.016	.004	.044**	.016	.006	.045**	.016	.005
	소득	.044***	.012	.000	.021	.011	.054	.017	.011	.115	.017	.011	.123
	교육수준	.151***	.031	.000	.141	.028	.000	.151***	.028	.000	.150***	.028	.000
가치관 요인	정치성향	.166***	.026	.000	.073**	.024	.002	.065**	.024	.006	.069**	.024	.003
다문화수용성					.464***	.010	.000	.457***	.010	.000	.460***	.010	.000
정부신뢰								.141***	.019	.000	.145***	.019	.000
다문화수용성*정부신뢰											.082***	.017	.000
상수		3.892			1.900			1.945			1.914		
R^2		.017			.210			.215			.217		
Adjusted R^2		.015			.208			.213			.215		
$\triangle R^2$											.002***		

F	10.891***	157.626**	151.780***	144.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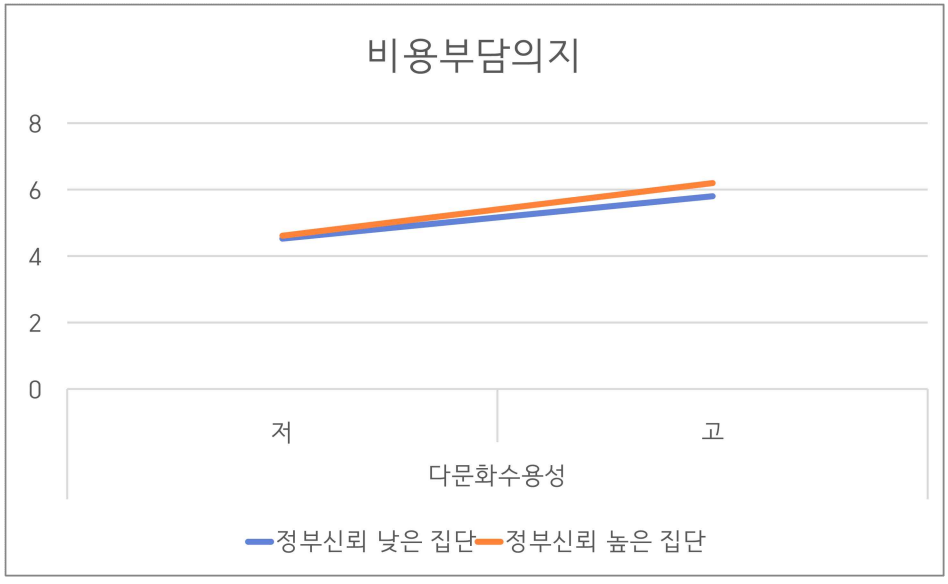
*p < .05, **p < .01, ***p< .001

a. 준거집단은 비경제활동인구

b. 준거집단은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



[부록: 그림 1-1] 다문화수용성-분배지향태도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부록: 그림 1-2] 다문화수용성-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Abstract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on Welfare Attitude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Lee, Cheong-ah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identify the direction of welfare policy and estimate future changes of the welfare stat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elfare attitudes of social members. The welfare state has faced a new challenge, as threat perception on external groups has weakened non-immigrants' support for welfare policies. In Korea, the increase in immigrants has been noticeable since the 2010s and the social demands for a multicultural society have emerged more. When

establishing a plan for an inclusive welfare stat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come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ac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on the welfare state. In a policy environment where support for welfare policies is weak by the threat perception on immigrants, trust in government will act as a mechanism to reduce negative welfare attitudes and enable individuals to take risks. Therefore, the research questions to be examin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w does multicultural acceptance affect welfare attitudes? Second, how does trust in government affect welfare attitudes? Third, is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on welfare attitude moderated by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This study was performed using 8,077 responses from the 「2021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ere verifi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effect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rust in government on welfare attitudes were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welfare attitudes was verif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as multicultural acceptance increased, it had a positive effect on 'distribution-oriented attitude' and 'willingness to accept costs for welfare expansion' respectively. Second, as the degree of trust in government increased, i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distribution-oriented attitude', and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willingness to accept costs for welfare expansion'. Third, trust in government moderates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on the welfare attitudes in the 'distribution-oriented attitude' model. However, the interaction term in the 'willingness to accept costs for welfare expansion' model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has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providing an empirical explanation of why we should pay attention to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rust in the government, which were neglected among the factors of welfare attitudes.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that it reaffirm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identified factors affecting welfare attitudes and deepen discussion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suggested to improve multicultural acceptance that increasing social capital among non-immigrants and immigrants, establishing mid- to long-term policy goals and education for changing non-immigrants' mind, promoting and monitoring of mass media, and implementing coexistence policy rather than assimilation policy are needed. Second, it is suggested to improve trust in government by providing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low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and establishing communication channels.

However, since only cross-sectional data were used,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research results generally, and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explanation of the causation is not clear. In addition, there are limitations that the conceptual validity of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rust in government is somewhat impaired, and there are limitations that welfare attitudes in each welfare policy areas have not been identified. These limitations need to be supplemented through follow-up studies.

keywords : multicultural acceptance, welfare attitudes, trust in government, moderating effect

Student Number : 2020-22239